
2026년 경제성장전략

- 대한민국 경제大도약 원년 -

2026. 1. 9.

관 계 부 처 합 동

순 서

I . 정부 출범 이후 경제정책 대응 및 성과	1
II . 향후 경제여건	2
III . 2026년 경제성장전략	3
1. 거시경제 적극 관리	6
2. 잠재성장을 반등	10
3. 국민균형성장 및 양극화 극복	24
4. 대도약 기반 강화	38
[별첨 1] 2026년 경제전망	43
[별첨 2] 잠재성장을 동향	54
[별첨 3] 양극화 현황 및 평가	55
[별첨 4] 주요 정책과제 Action Plan	57

I. 정부 출범 이후 경제정책 대응 및 성과

□ 출범 직후부터 무너진 경제 회복 및 성장 모멘텀 마련에 총력

- 출범 첫날(6.4일)부터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TF를 가동, 20일만에 2차 추경안 국회 제출^{6월}, “진짜성장” 위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마련^{8월}
-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對美 관세협상을 타결^{10월}해 수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우리 기업의 미국시장 진출 기반 강화
- 법인세율 '22년수준 환원 등 조세정책 정상화해 약화된 세입기반 확충^{12월}
- AI·신산업 집중투자, 역대최대 지출구조조정 등 성과중심 '26년 예산^{12.2일/5년만에 헌법준수}으로 「적극재정→성과제고→경제성장→지속가능재정」 선순환 기반 마련

□ 경기 반등, 증시 사상 최고, 민생회복 등 가시적 성과 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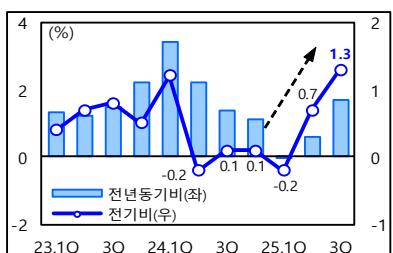
- (경기) 새정부 온전한 첫 경제성적표인 '25.3분기 1.3% 성장하며 15분기 만에 최고, 수출 사상 최초 7천억불 돌파 → '25년 1.0% 성장 예상
- (증시) 상법 개정, 불공정거래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정책효과로 코스피 사상 첫 4,000 돌파^{'25.10.27} 후 지속 상승하며 주요국 대비 가장 높은 상승률
- (민생) 소비쿠폰 등 추경에 힘입어 내수가 회복^{*}되며 내수 연관 서비스업 중심 고용 증가폭 확대

* '25.3Q 소매판매(전년비 +1.5%) 14분기 만에 (+) 전환, 숙박음식점업 생산(+1.5%) 10분기 만에 (+)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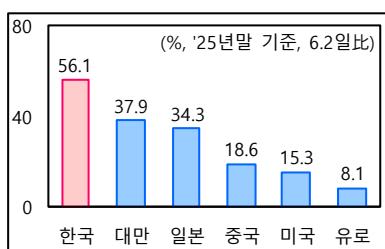
▪ 역대 최대규모 신용사면으로 성실상환자의 정상적 경제활동 복귀 지원

* 개인 255.6만명, 개인사업자 30.6만명 등 286.2만명 연체이력 삭제 조치 완료('25.11월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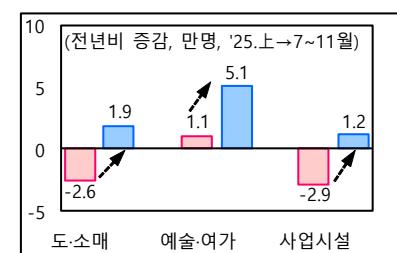
실질GDP 성장을



주요국 주가지수 상승률



취업자 증감(내수 연관 서비스업)



II. 향후 경제여건

- ◇ '26년 우리 경제는 내수 개선, 반도체 호조* 등으로 경기 회복세 확대 예상.
다만, 잠재성장률 하락, 양극화('K자형 성장') 등 구조적 과제도 상존

* D램 매출증가율 전망(%): '25.3→4Q) : <WSTS> ('25)34→50 ('26)23→45 <Gartner> ('25)33→48 ('26)30→74

- ① (거시경제) 경기는 소비 개선, 건설부진 완화 등으로 '26년 2.0% 성장,
물가는 내수 개선 등 상방요인에도 국제유가 하락으로 '26년 21% 상승 전망

- 다만, 외환·부동산시장 불확실성, 가계부채·새마을금고 등 리스크 잠재

* 원/달러 환율(기말): ('25.3Q)1,403→(4Q)1,439 / * 서울APT 가격(전주비, %): ('25.10.3주)0.50→(12.5주)0.21

* 가계대출 증감(전월비 조원): ('25.8)4.7 (9)1.1 (10)4.9 (11)4.1 / 새마을금고 연체율(%): ('24.6)7.24 (12)6.81 ('25.6)8.37

- ② (잠재성장률) 인구 감소*, 투자 위축**, 생산성 정체로 지속 하락

* 생산연령인구 증감(만명, 연평균): ('10년대)17 ('20년대)△31<'20년부터 감소 지속 ('30년대)△50 ('40년대)△48

** 투자 증가율(%), 연평균, 총고정자본형성): ('00년대)4.6 ('10년대)3.2 ('20~'24년)1.2

- 현 추세 지속시, '30년대 1% 내외, '40년대 0%대까지 하락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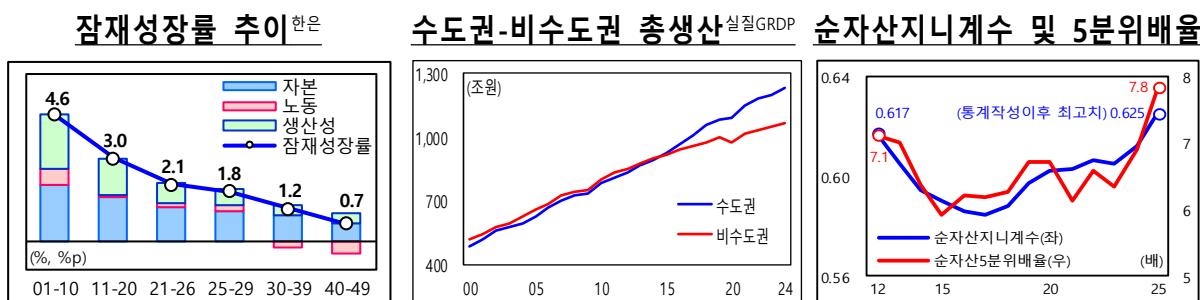
- ③ (양극화) 대기업·IT 편중 성장* 속 大-中企 불공정거래 및 노동시장 이중
구조**, 지역간 격차 확대 등으로 소득·자산 양극화 심화('K자형 성장')***

* IT/비IT 부문 국내총생산('00년=100): ('95)42/76 ('05)185/126 ('15)440/178 ('24)882/214

** 시간당 임금('24.6월, 대기업·정규직=100): (大·정규)100 (大·비정규)62.3 (中企·정규)57.7 (中企·비정규)41.5

*** 소득 지니계수('23) : (韓)0.323 vs. (OECD)0.307 / '25.3월 기준 순자산지니계수 통계작성 이후 최고

- 인적자본 형성 저해(교육·근로의욕 저하), 출생률 하락(수도권 집중, 경쟁심화),
내수기반 약화(고소득층 한계소비성향 低) 등으로 성장에도 부정적 영향 예상



III. 2026년 경제성장전략

경제대도약 마스터플랜 下 연차별 경제 운영

◇ 대내외 도전에 대응, 성장 패러다임을 대전환해 잠재성장을 반등과 양극화 극복을 동시 달성하고 국가가 성장하는 만큼 국민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경제대도약 실현

① (대외) AX·GX 등 산업 대전환과 중국 기술추격, 자국우선주의, 밸류체인 위기 등 글로벌 경제질서 재편에 적극 대응

② (대내) 불평등과 격차를 완화하고, 경쟁과 갈등의 악순환을 극복해 모두의 성장, 지속가능한 성장, 초혁신성장 경제를 달성

⇒ 광복 100주년, 2045 대한민국 경제대도약을 위한 국가 아젠다 발굴해 현정부 내 경제대도약 액션플랜 마련('26.上), 중장기 도전과제 대응을 위해 미래비전 수립('26)

비전

광복 100주년, 2045 대한민국 경제大도약

국
가
아
젠
다

지방주도성장
(국토공간 혁신,
재정 차등·우대 등)

모두의 성장
(중기·벤처·창업, 자영업자,
취약계층 등)

지속 가능한 성장
(산업안전·재난·보건의료 등)

매력적인 성장
(K-컬처·관광 등)

新산업정책
(국내)

新글로벌 경제정책
(경제안보 등)

新노동·일자리정책

혁신인재 양성
(분야·대상·직능별 등)

녹색 대전환
(탄소중립, 에너지전환 등)

국가인구전략
(저출생, 고령화, 외국인력 등)

구조혁신
(금융·규제·공공·재정 등)

거시경제 안정
(물가·부동산·외환·
가계부채 등)

'26년

이러한 비전 下 '26년을 경제대도약 원년으로 만들기 위한
선도과제 중심 「2026년 경제성장전략」 마련

정책
목표

대한민국 경제大 도약 원년

4대
정책
방향

거시경제 적극 관리

- ①경기 활성화
- ②물가 안정
- ③리스크 관리



잠재성장을 반동

- ④국가전략산업 육성
- ⑦생산적 금융
- ⑤초혁신경제 구현
- ⑧인적자본 극대화
- ⑥전략적 글로벌 경제협력



국민균형성장 및 양극화 극복

- ⑨지방주도성장
- ⑩모두의 성장
- ⑪안전이 기본인 지속가능한 성장
- ⑫문화가 이끄는 매력적인 성장



대도약 기반 강화

- ⑬규제개혁
- ⑮재정 등 구조혁신
- ⑭적극적 국부창출 실행

「2026년 경제성장전략」 4대 분야-15대 과제-50대 세부과제

1 거시경제 적극 관리

① 경기 활성화	① 적극적 거시정책 통한 총수요 관리, ② 소비·투자·수출 등 부문별 활성화
② 물가 안정	① 생활물가 안정, ② 서민 생계비 경감
③ 리스크 관리	① 외환시장 안정, ② 부동산시장 안정, ③ 금융시장 안정

2 잠재성장을 반등

④ 국가전략산업 육성	① K-반도체 세계 2강 도약, ② 방산 4대 강국 도약, ③ 바이오산업 육성, ④ 주력산업(석화·철강) 경쟁력 제고
⑤ 초혁신경제 구현	① AI 대전환(AX), ② 녹색 대전환(GX), ③ 초혁신경제 15대 선도프로젝트, ④ R&D 혁신, ⑤ 디지털자산 제도화 및 활용, ⑥ 경제대도약 마스터플랜 마련
⑥ 전략적 글로벌 경제협력	① 전략적 对美투자, ② 통상환경 변화 대응, ③ 경제안보 강화
⑦ 생산적 금융	① 첨단산업 금융지원, ② 국내주식 장기투자 촉진, ③ 원화국제화 로드맵 마련 및 MSCI 선진국지수 편입 추진
⑧ 인적자본 극대화	① 과학기술인재 양성, ② 저출생 대응, ③ 외국인력 전략적 활용

3 국민균형성장 및 양극화 극복

⑨ 지방주도성장	① 지방 산업·인프라 및 대학 혁신, ② 지방 투자·소비 촉진, ③ 지방 차등·우대, ④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⑩ 모두의 성장	① 大·中企 상생·공정성장, ② 벤처·창업 활성화 및 재도전 생태계 구축, ③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④ 청년 지원 강화, ⑤ 중장년 고용촉진 및 노후소득보장, ⑥ 저소득층 지원 강화
⑪ 안전이 기본인 지속가능한 성장	① 산업안전 투자확대 및 관리강화, ②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
⑫ 문화가 이끄는 매력적인 성장	① K-컬쳐산업 육성, ② K-관광 3천만명 조기달성

4 대도약 기반 강화

⑯ 규제개혁	① 첨단·신산업 규제 개선, ② 기업규모별 규제 개선, ③ 경제형별 합리화
⑰ 적극적 국부창출 실행	① 한국형 국부펀드 신설, ② 국유재산 관리 강화, ③ 국채 효율적 관리 및 WGBI 편입
⑱ 재정 등 구조혁신	① 재정 운용방식·지출구조 혁신, ② 세제 혁신(체납관리 강화, 비과세·감면 정비 등), ③ 조달행정 혁신, ④ 공공기관 혁신

1. 거시경제 적극 관리

◇ 적극적 거시정책 및 부문별 활성화 통해 경기 활성화(2% 성장)하고,
물가 안정 속 외환·부동산·금융시장 잠재 리스크 선제적 관리

1 경기 활성화

◇ 적극재정(8.1%), 공공기관·정책금융(+20조원), 민간투자 활성화 등 총수요 관리

- (재정·공공기관) 적극적 재정정책('26년 총지출 +8.1%), 역대 최고
공공기관 70조원 투자(66.0→70조원, +4조원)
- (정책금융) 첨단전략산업 육성, 관세 대응 및 중소기업 지원 등을 중심으로 '25년 수정계획 대비 +16.1조원 증가한 633.8조원 공급
- (민간투자) 年 4.4조원 투자집행하고, BTL 특별인프라 펀드(1,000억원)
신설 등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발표('26.1월)

◇ 소비·투자·수출 등 부문별 활성화 대책 적극 추진

【 내수 】

- (소비) 車 개소세 인하를 6개월 연장(5→3.5%, 한도 100만원, '26.6월 말 종료)하고, 전기차 전환지원금(최대 100만원)을 1월부터 지급
 -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을 지방·대기업·외국인 및 온·오프라인으로 확장('26.下)하고, 소상공인 특화 동행축제 추가 개최('26.上)
- (투자) 중소·중견기업 시설투자자금 1조원 수준 추가 확대(30.5→31.4조원) 등 시설투자자금 역대 최대 54.4조원 공급(51.1→54.4조원)
 - 외투기업의 국내 R&D투자 진입애로 해소방안*을 마련('26.3월)하고, 유턴 유치-투자-정착全주기 지원체계 강화**

* 예) IP 계약지원, 국제법률, 투자 등 VC컨설팅, 기술교류, 행정지원 등 전주기 밀착관리 등

** 유치국내외 IR 확대 투자유턴보조금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국비분담률 상향(75→80%) 정착 유턴기업 애로청취 정례화 등

【 수출 】

- (금융) 무역보험 역대 최대 공급^{275조원} 등 수출금융 확대(365→377+α조원)

- (재정) 수출바우처 공급을 확대(2,363→3,525억원)하고, 온라인 수출 바우처 신설(기업당 최대 1천만원) 등 수출 다변화 지원
- (환리스크 대응) 5대 시중은행 선물환수수료 인하지원을 확대(2,500→14,500社)하고, 수출 중소·중견기업 환변동보험 0.2조원 확대(1.0→1.2조원)
- (비관세장벽 대응) 원산지·품목분류 등 주기 관리·지원해 애로 해소
 - * (준비단계)사전정보 제공 → (실행단계)원산지·품목분류 지원 → (사후단계)원산지 검증 대응
- (서비스 수출) 강점·기회요인 등 감안 서비스 수출 혁신전략 수립('26.上)
 - * 예) 수출금융 확대, 업종별 특화 수출모델 개발·확산, 관광·콘텐츠·제조 등 융합 서비스 수출 지원 등
- (재외공관) 공공·민간을 망라한 수출 전진 기지화해 수출지원 강화
 - * 재외공관 경제안보점검회의 개최, 재외공관 기업지원협의체 정례화, 헬프데스크 설치 등

2 물가 안정

◇ 범부처 협업해 먹거리 등 생활물가 안정 및 생계비 경감 총력

【 물가관리체계 강화 】

- 부처별 차관급 물가안정책임관 지정, 업무평가에 소관품목 물가지표* 반영 및 격주 물가관계차관회의(월1회 장관회의) 통해 물가상황 밀착 점검·관리
 - * 예) (농식품부)농축산물·가공식품 (해수부)수산물 (행안부)지방공공요금 (교육부)초·중·고 학원비 등

【 먹거리 등 생활물가 집중관리 】

- (단기대응) 수급 관리*, 할인지원, 할당관세** 등 가용수단 총동원
 - * ❶(쌀)수급 재전망^{26.2월} 토대 수급안정방안 검토 ❷(콩)국산 비축콩 할인공급 등 공급계획 수립^{26.4월}
 - ❸(과일)사과·배 지정출하 확대^{0.6~0.8만톤} ❹(계란)위험지역 특별점검 등 AI 방역관리 강화 납품단가 인하지원^{26.上}
 - ❺(수산물)수입업체 수매자금 융자대상 확대^(현행명태→추가 고등어·오징어, '26.上)

** 1.1일부터 식품원료 22종 할당관세 적용중 + 물가·수입가격 등 모니터링해 긴급할당관세 적용 추진
- (구조개선) 유통구조 개선, 경쟁촉진, 생산성 제고 등 근본적 대책 병행
 - ▶ (유통구조 개선)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거래비중: ²⁵6 → ²⁶10→³⁰50%),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 발표^('26.1월),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연구용역^('26.上)
 - ▶ (경쟁촉진) 주요 생필품 담합조사를 신속종료(돼지고기, 설탕, 밀가루 등 주요 품목 가격담합 조사 완료, '26.上), 담합행위 적극 감시·엄중 제재, 설탕 할당관세 수입물량 확대(10→12만톤)
 - ▶ (생산성 제고) 공동영농 확산(공동농업경영체 지정요건 완화<면적>50→20헥타르 이상/<농업인>25→5명이상), 스마트 농수산업 촉진

【 생계비 경감 】

○ 식비, 에너지, 교통, 통신, 돌봄 등 전분야 생계비 경감

- ▶ (식비) 천원의아침밥 확대^{年 대학생450→540만식/산단근로자5→90만식}, 中企 직장인 점심 20% 지원^{5만명, 월 4만원 限, 5개월}
 - (쌀) 취약계층 대상 정부양곡 60~90% 할인지원(생계의료급여수급자 2,500원 차상위계층 등 1만원 1인 10kg/월)
- ▶ (에너지) 찾아가는 에너지복지서비스 확대(^{4.7→12.6만가구})하고, 연탄가구 연료전환(^{최대 1만가구}) 지원
- ▶ (교통) 모두의카드^{(수도권/일반) 6.2만원 초과분 100% 환급} 도입^{26.1.1~}하고, 만65세이상 K-패스 환급률 인상^{(20%→30%)^{분할}}
- ▶ (통신) 데이터안심옵션 도입, 맞춤형 최적 요금제 주기적 고지 의무화(전기통신사업법령 개정, '26.上)
- ▶ (돌봄) 요양병원 중증환자 간병비에 건강보험 적용해 본인부담 경감^(본인부담률 100→30% 내외, '27~)
 - (생리용품) 만 9~24세 취약계층 여성청소년에 생리용품 구입비(바우처) 지원(年 16.8만원)

3

리스크 관리

◇ 외환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고, 구조적 수급 불균형 해소

○ (외환 수요) 주요 외환 수급 주체별 구조적 불균형 영향 점검

* (수출기업) 환전·해외투자 현황 정기점검, 정책자금 등 연계 검토 (금융회사) 해외투자 현황과 투자자 보호 등 개선 필요성 점검 (국민연금) New Framework 마련 정책논의 추진

○ (해외 자본유입) 외환·금융규제 개선* 및 3종 세제지원** 신설

* ①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 폐널티 유예(~'26.上) ② 외국계은행 국내법인 선물환포지션 규제 비율 200%로 완화 ③ 국내운전자금 용도 외화대출 허용

** ① 해외주식 매각후 국내주식 투자시 1년 한시 양도세 감면(50~100%) ②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도입 및 환헷지시 양도세 공제 신설 ③ 국내모기업의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상향(95→100%)

◇ 주택공급 가속화, 수급관리 등 부동산시장 안정

【 주택공급 촉진 】

○ (수도권 공공택지) '26년 3기 신도시 1.8만호 포함 총 5만호 착공 및 고덕강일(1.3천호), 고양창릉(3.9천호) 등 2.9만호 분양 추진

○ (도심공급) 공공 도심복합사업 일몰^{26.12월} 폐지 및 용적률 완화(1.4배) 적용 확대(역세권 준주거 → 역세권·저층 주거, 3년 한시)

▪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 공공정비 용적률 인센티브, 이주수요 관리방안 개선 등 정비사업 제도 종합개편(「도시정비법」 개정, '26.上)

○ (특화주택) 법적 근거 마련('26.1분기) 및 사회적기업 등의 운영 참여 확대

○ (모듈러주택) 청년·1인가구 등을 위해 모듈러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30년 까지 1.6만호+α**)하고, 특별법 제정, 규제특례 등 활성화 방안 추진('26)

* '26년중 LH 등 사업자가 임대주택·관사 등 건축시 건설임대 확대, 신축매입임대 시범사업 등 모듈러주택 공공물량 2배 확대(1,500→3,000호+α) / ** 주택기금 1.5만호, 국유기금 0.1만호

【 수급 관리 】

- (지방주택) 수요확충 3종 패키지 추진

① 인구감소(관심)지역 주택*은 양도·종부세 부과시 주택수 미포함, 양도세 중과 제외 *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기준시가 9억원이하 (그 외 지역)4억원이하

② 지방 미분양 해소 위해 CR리츠 세제지원 연장*('25→'26년말)하고, 가칭주택 환매 보증제 도입(지방주택 수분양자가 주택매입 리츠에 분양주택 환매 가능)

* 취득세 중과배제, 종부세 합산배제 및 법인 양도소득 추가과세 배제

③ 1주택자가 비수도권 준공후미분양 주택 추가취득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되는 미분양 주택의 가액기준 상향(6→7억 원)

* 양도 12억원 이하 비과세, 12억원 초과 장특공제 우대 종부기본공제 우대(9→12억원), 고령·장기보유 세액공제

- (상장리츠) 상장리츠에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 등 세제혜택 확대

- (부동산시장 감독)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컨트롤타워로 부동산감독 기구 설립 추진(「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26.下)

【 전세제도 보완 및 공적주택 확충 】

-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등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 종합 지원방안을 마련('26.上)하고, 전세금 반환보증 요건 現 전세가율 90% 단계적 강화

- 임차인 보증금 보호를 강화하고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보증 방식을 다양화하기 위해 사전적 보증금 보호방식인 전세 신탁* 도입 추진

* 등록임대사업자가 원하는 경우 보증금의 일부를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시에 보증기관에 신탁·담보 제공하고, 해당 기관은 해당 금액 운용후 수익을 임대인에 공유

- 공적임대주택을 최소 15.2만호 공급하고, 공공임대주택은 넓은 평형 (60~85m²) 비중을 높이고 역세권 등 직주근접 지역에 공급 확대

【 부동산 세제 】

- 연구용역, 관계부처 TF 등 통해 세제 합리화 방안 마련

◇ 가계부채, 부동산 PF 등 금융시장 안정적 관리

- (가계부채) 가계부채 총량관리를 통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하향 안정화하고, DSR 적용대상 확대 등 상환능력 중심 여신관리체계 고도화

- (부동산PF) 정상사업장 자금 공급, 부실사업장 재구조화·정리, 새마을금고 금융 당국과 건전성 관리·감독 공조체계 강화 등 연착륙 지속 추진

2. 잠재성장을 반등

- ◇ 국가전략산업 투자, AX·GX 등 초핵신경제 구현, 전략적 경제협력을 집중 추진하고 생산적 금융과 인적자본 극대화로 뒷받침해 잠재성장을 반등 원년 달성

1 국가전략산업 육성

- ◇ “반도체+α” 전략산업 육성으로 성장동력 확충·다각화

① K-반도체 세계 2강(반도체 제조 + 팝리스) 도약

- 대통령 소속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27~‘31년) 수립(‘26.4분기)
* (구성)위원장(대통령) 1명 포함 20명 이내 위원 (역할)반도체산업 주요 정책 심의·의결
- 금융·재정·세제·규제·R&D·인재 등 전방위 지원
* 국민성장펀드 통해 반도체 분야 4.2조원 지원, 반도체 클러스터·인프라 조성시 인·허가 타임 아웃제 적용(「반도체특별법」 제정), 반도체 특성화대학원 확대(現 6개→‘30년 목표 10개) 등

② 방산 · 바이오 · K-컬쳐^{36P 상술} 등 신성장엔진 육성

【 방산 4대강국 도약 】

- (협력 다변화) NATO, EU 등 다자기구와의 협력 채널을 확대^{*}해 유럽 조달시장 진입 지원 * 한-NATO 방산협의체 운영, 한-EU SAFE 협정 체결 추진 등
- (스타트업 육성) 진입방산스타트업 챌린지 통해 스타트업 진입 촉진, 성장군 수요연계 R&D 지원(구매조건 R&D 지원 등) 및 초도물량 양산지원
 - 상생협력 방위산업 상생협력 수준 평가^{*} 도입해 원가산정 등 인센티브 부여 * 협력사 R&D 인프라 지원, 인력개발·교류 실적, 신규협력 활용 등 고려
- (방산인력 양성) 군 장병 대상 무기체계 관련 AI 개발 등 AI 전문교육 확대 및 계약학과^{**}, 거점대학^{**} 추가지정 등을 통해 첨단 방산인력 양성 강화

* (현행) 국방우주, 무인로봇·AI 등 2개 분야(5교) → (추가) 국방 반도체·센서분야 포함(+2교 예정, 공모)

** (현행) 창원대(부울경권, 50명) → (추가) 他 권역 1개 학교 추가 지정(+50명 예정, 공모)

【 바이오산업 육성 】

- (바이오 정책 거버넌스 구축) 국무총리 소속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를 출범해 가칭 바이오 산업 정책 로드맵 마련·발표(‘26.1분기)
* 국가바이오위원회(위원장: 대통령) +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통합
- (신약개발·출시 지원) 의료제품 심사인력 확충 등 통해 의료제품 인·허가 심사기간 단축* 및 임상시험·자료제출 간소화** 추진
* (현행) 신약 420일·바이오시밀러 406일·신의료기기 398일 → (개선) 240일 ** 바이오시밀러 3상 면제기준 마련(‘26)
- (글로벌 진출 확대) 금융·R&D·규제·입지 등 전방위 지원
 - ▶ (금융) 국민성장펀드 통한 '바이오분야 메가 프로젝트' 수립·추진
 - ▶ (R&D) 6대 유망분야(의료용 로봇·임플란트 등) 첨단의료기기 전주기(개발·임상·인·허가) R&D 지원하고, 오픈이노베이션 지원 확대 등 제약사·벤처 혁신기술 개발 촉진
 - ▶ (규제) 「가칭 디지털 헬스케어법」 제정으로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제고
 - ▶ (입지) 첨단의료복합단지 등 기존 바이오헬스 클러스터 간 인프라 공유·공동연구 등 고도화

◇ 저탄소·고부가 전환, 제조공정 혁신 등으로 석화·철강산업 경쟁력 제고

【 석유화학 】

- 대산 1호 프로젝트는 조속히 사업재편 승인 및 지원방안 마련
 - (금융) 채권금융기관이 실사를 바탕으로 만기연장, 상환유예, 고부가 전환에 대한 신규 자금 등 지원
 - (세제) 사업재편 계획에 따라 금융채무 상환 등을 위한 자산매각시 법인세 과세이연 기간 연장 등 세제지원
- 신성장원천기술 추가·확대*, AI 활용 공정혁신 및 소재 설계, 사업 재편기업 R&D 우선 지원 등 석유화학산업 고부가가치화 총력
* 이차전지 제조공정 염폐수재활용 기술, 친환경 냉매개발 등
- 대기업, 중소·중견, 협력사 등 화학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화학산업 생태계 종합지원 대책 마련(‘26.上)

【 철강 】

- 중점 조정대상인 철근 사업재편 등 감축 로드맵 제시(‘26.上)
- 신성장원천기술 추가·확대*하고, 철강 AX 강화** 등 공정관리 고도화
* 고로 용선 및 전기로 용강 합탕기술, 디지털 영상분석 기반 철스크랩 판정·선정 기술 등
** AI 기반 공정관리(예: 제철공정 AI 고위험 작업 자율로봇 기술개발), 철강산업 AI 융합 실증허브 구축 등
- 수소환원제철 실증 R&D 중점 추진하고, 특수탄소강 R&D 로드맵 및 철스크랩 산업 육성방안 마련(‘26.上)

◇ 인프라·기술, 산업, 인재 등 전분야 AI 대전환으로 AI 3대 강국 도약

① AI고속도로 구축, AI기술 확보 등 통해 AI 혁신 인프라 구축

- (AI고속도로)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운영을 위한 민·관 합작 SPC*를 신속 설립하고, 건축 설계, 에너지·건축 인허가 등 거쳐 연내 착공
 - * 정부 + 정책금융(예: 산은, 기은) + 민간 참여자 출자 예정
 - 정부 활용분 첨단 GPU(1만장)를 산·학·연, 국가 AI프로젝트 등에 체계적 배분하고, '26년 1.5만장, '28년까지 5.2만장 이상 확보 추진
 - 전력망 확충, 전력계통영향평가 개선(예: 비수도권 우대) 등 전력수요 뒷받침
- (AI기술 확보) AGI 연구 위한 민관협력 차세대 AI 연구조직 설립 추진, 국산NPU 활성화 및 기술선점 위한 대규모 실증*, 공공분야 도입** 등 추진
 - * 독자 AI모델+국산 NPU 패키지 실증 등 / ** 예) 국산 NPU 기반 AI CCTV 전환 등
 - 독자 AI모델 공개('26년초)해 민간서비스 출시 유도, 정부 AX사업 우선 활용
 - 양자기술 기반 NEXT-AI 실현을 위해 양자기술국가전략 수립('26)
 - * 양자-슈퍼컴 하이브리드 컴퓨팅 인프라 적극 확충, 국방·공공 수요기반 기술개발 등
- (AX원스톱 지원) 정부 AX사업 추진시 첨단 GPU, 독자 AI모델 등 AX공통자원 활용을 지원하는 AX원스톱 지원시스템 운영

② 피지컬 AI 1등 국가 목표로 산학연 연합 통해 7대 선도분야 집중 지원

- (AI로봇) 휴머노이드 개발 15대 프로젝트* 추진 및 월드모델** 기반의 AI 학습을 통한全 분야 AI 로봇 확산 추진
 - * 예) 제조현장제조환경별 맞춤형 훈련·작업 가능한 AI 휴머노이드 플랫폼 재난구조·재난구조 초감각 4족보행 로봇 물류·자율작업 가능 이동식 양팔 휴머노이드 로봇 농업·완전 자율주행·작업수확·이송·적재 등 다목적 농업로봇
 - ** AI의 실세계구현 지원 모델로 제조·물류 등 비정형 산업현장 활용 고도화를 위한 핵심기술 접목
- (AI자동차) 자율주행 시범운행 범위를 도시전체로 확장한 실증도시 조성('26.上), 자율주행 중심 교통·물류 AI전환계획 수립('26.3분기)

- **(AI선박)** 자율운항선박 기본계획('26~'35) 수립('26.上) 및 AI 완전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본격 착수('26.下)
- **(AI가전)** 글로벌 AI 가전 시장 선점 위한 실증·상용화·핵심모듈 개발 지원 * 예) 노트북·냉장고·TV·청소기 등 AI 기능 탑재 제품 또는 솔루션 개발 지원 등
- **(AI드론)** 농업 등 5대 분야* 드론 개발·규제 합리화**, 드론 실증 도시 지정('26.上) * '25~항공·소방, '26~농업·물류·시설점검 ** 비행승인 절차 간소화 등
- **(AI팩토리)** 제조AI 2030 전략을 마련('26.1분기)하고, 中企 AI 스마트 공장 확대(120→430개) 및 大·中企 상생형 AI 공장 확대*

* ('25)LG엑사원과 제조솔루션 결합, 협력사 AI 도입(40억원) → ('26)他대기업 확산(100억원)
- **(AI반도체)** 업종별 자동차·가전·로봇·드론 컨소시엄 수요-팹리스-SW기업 구성해 국산 온디바이스 AI반도체 개발·실증 착수, '30년까지 10개 개발 추진

③ 수요 높은 서비스부터 3대 선도 공공 AX 단계적 확산

- **(고용)** 인재추천, 구인공고 등 구인기업 원스톱 채용지원 플랫폼 펌케어 을 구축하고, '27년까지 고용행정 전분야로 AI 고용서비스 확대
- **(납세)** 세무상담·검색이 가능한 AI 챗봇을 우선 도입하고, '27년부터 생성형 AI를 통한 납세지원 서비스 제공
- **(신약심사)** AI 허가·심사 서비스를 도입해 제네릭의약품 검토('26) 부터 자료제출 의약품 검토('27), 신약 검토('28) 등으로 확대

④ 전국민 AI 한글화 등 AI 기본사회 구현

- **(AI 교육기반 구축)** 온·오프라인 인프라 등 전국민 AI 한글화 추진
 - **(온라인)** 통합 플랫폼 우리의AI러닝 조성 및 기준 플랫폼 연계로 온라인 AI 교육 'single window' 구축*하고, 맞춤형 AI 교육 콘텐츠 제작**

* 공공 AI교육 플랫폼부터 우선 연계 → 단계적으로 민간 AI교육 플랫폼으로 연계 대상 확대
 ** (초중고생)AI 기본교육 확대 (대학생)비전공생 대상 AI 활용능력 강화 (청년·군인)구직·재직청년·군장병에 취업·업무적용 가능한 AI교육 (일반국민)소상공인·자영업자 비즈니스 역량 강화 등
 - **(오프라인)** AI 실습·개발 등 가능한 거점(AI 라운지) 5개소 구축
- **(활용제고)** AI 경진대회를 가칭 AI슈퍼위크 집중개최 및 사업화까지 지원(중기부 창업패키지 사업 가점 등)하고, 민간 AI 자격증 국가공인 확대

◇ 온실가스 감축 가속화,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로 녹색 대전환(GX) 추진

- 기후위기를 성장기회로 활용하고 2035 NDC 이행을 위해 전력·산업·수송·건물 등 전부문 녹색 대전환과 지원방안을 담은 K-GX 전략 마련('26.上)
 - (전력) 탈탄소 에너지 대전환을 위해 재생e 중심 에너지 시스템 설계
 - * 재생e보급 핵심마을 500개 이상 조성^{'26~'30 / 시장제도 재생e 보급제도 단계적 전환 RPS→경쟁입찰 일원화}
 - (산업) 설비·공정전환 R&D 확대*, 감축투자 보조·융자, 저탄소 인증제 개편**, 탄소크레딧 거래소 신설 등 산업 탈탄소 전환 지원 확대
 - * 탄소중립산업기후테크 등 전부문 투자확대 ** 탄소배출량 기반→탄소배출량·탄소감축정도 모두 고려
 - (수송·건물)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의무화^{녹색건축법 개정/'26.2분기}, 히트 펌프 확대 등 자립형 친환경에너지 시스템 설계, 친환경차 보급 확대
 - * 버스·화물 등 친환경 전기·수소차 전환, 대용량 수소교통 복합기지 지속 확대(최근 5년 평균 1~2곳)
 - (인프라) 해상풍력 인프라 선박, 항만 등, 전력망 차세대전력망, 유통선로 구축, 첨단산업 용수공급 시설 등 K-GX 추진 위한 대형 인프라 확충 계획 마련
- 재정·금융 등 패키지 지원 통해 가시적 성과 조기 창출
 - (재정) K-GX 전략 추진을 위해 향후 10년간 대규모 재정투자 추진
 - (금융) 기후금융·녹색금융 공급확대, 한국형 전환금융 도입^{'26.1분기}
 - (제도) K-Taxonomy, 저탄소 제품 등 탈탄소 경제활동 전방위 지원
 - (수출) 탄소중립산업 수출전략, K-Energy 수출대책 등 전략 마련 추진
- 유엔기후변화협약, 글로벌녹색성장기구 등과 협력해 글로벌 자발적 탄소시장(GVCM) 시범사업을 발굴*하고 우리 기업 참여 지원
 - * 측정·보고·검증(MRV) 기준, 방법론 등 시범사업에 활용할 기준 마련 병행
- K-GX 추진단(단장: 경제부총리, 간사: 기후부 장관) 내 법정부 및 민간 협의체 구성해 구체적 정책과제 발굴 및 법·제도 개선 추진

민관합동 K-GX 추진단(단장: 경제부총리)

간사: 기후부 장관

법정부 협의체(재경부)

기후부·산업부·국토부·중기부·과기부·농식품부·
해수부·노동부·국조실·기획처·금융위·산림청

민간 협의체(대한상의)

한경협·경총·건설협회·중기중앙회·중견련·철강협회·
석유협회·화학협회·시멘트협회·반도체산업협회·
재생에너지협회·자동차산업협회

※ 관계부처, 협·단체 등 협의체 구성은 추후 변동 가능

◇ 초혁신경제 15대 선도프로젝트 성과 가시화

- 기업 중심 초혁신경제추진단 통해 패키지 지원으로 성과 조기창출

① (규제) AI 바이오 혁신거점에 데이터 활용 규제특례 적용^{*}하고, 국가바이오 데이터 통합시스템 구축해 데이터 공유·활용기반 마련(가칭바이오데이터법 제정)

* AI바이오혁신거점에 ①폐쇄망 클라우드 구축 → ②완화대상 규제 선정 → ③규제 특례·개선

② (수요창출) 매칭 기업-공공부문 기술교류회^{그래핀부터 단계적 확대} 등 통해 설계시 부터 제품검증, 실증 K-테스트베드^{중소·벤처시제품 실증인프라 제공} 활용 실증·활성화*

* K-테스트베드 공공기관·지방정부 참여 확대(현재 공공기관 74개, 지방정부 1개 참여 중)

- 관로 실증완료 제품의 혁신제품 연계 지원 및 시범구매 적극 추진

③ (금융) 국민성장펀드·모태펀드 중점 공급하고, 신·기보 우대 보증^{*} (각 2조원 규모, 보증료율 감면·보증비율 상향) 신설 통해 지원 보강

* 초혁신경제 15대 프로젝트 포함 AI 등 첨단전략산업 기업 대상

④ (세제) 국가전략기술(차세대전력(에너지)반도체·LNG화물창 기술), 신성장원천기술(그래핀·특수탄소강 기술) 추가·확대

⑤ (R&D) 사전기획점검·사업추진심사 실시^{AI바이오 등 대형신규사업}, 15대 선도프로젝트 연구장비 도입기간 단축(120→50일^{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등 R&D 신속 추진

❖ '26년 초혁신경제 15대 선도프로젝트 주요과제

첨단 소재·부품	▶ (차세대전력(에너지)반도체) 기술로드맵 수립 ^{26.1분기} , 지역거점 공공팹 실증인프라양산팹 구축 지원 ▶ (LNG화물창) 화물창 실증사업계획 수립 ^(26.上) , 핵심 기자재 ^{극저온 보냉제 등} 생산기반 구축 ▶ (그래핀) 그래핀 활용 제품 양산 ^(조리가전, 뷰티가전 등) , 기술 상용화 로드맵 수립 ^(26.1분기)
기후·에너지·미래대응	▶ (HVDC) 500kV 전압형변압기 등 자체기술 확보, 實 전력망 실증 준비(SPC 설립 등) ▶ (그린수소) 대규모 실증사업 추진(최대 50㎿) 및 규제 합리화(액화수소 안전기준 마련 등) ▶ (스마트 농·수산업) AX 기반 최첨단 스마트팜·아쿠아팜 선도지구 지정·조성(각 1개, '26.上)
K-붐업	▶ (K-바이오의약품) ①국민성장펀드·임상3상 특화펀드(600억원) 통해 글로벌 임상3상 지원, ②해외 인수·진출병원을 거점으로 중소기업 수출을 지원하는 新수출모델 마련 ▶ (K-콘텐츠) 콘텐츠 미래전략분야 펀드(500억원) 조성, AI 콘텐츠 제작 생태계 구축

◇ R&D 투자확대 및 국가난제 해결 임무중심·도전형 R&D로 고도화

- (R&D 확대) 정부 총지출의 5% 수준으로 R&D 예산 확대 노력

* R&D 예산(조원, [정부총지출 대비 비중]) : ('25)29.6[4.4%] ('26)35.5[4.9%]

- **(국가전략기술 체계고도화)** 국가전략기술 관리체계를 국가 임무 달성 중심으로 정비하고, 부처 간 협업 강화('26.上)
 - * 국가전략기술(국가전략기술육성법, 조세특례제한법), 국가첨단전략기술(국가첨단전략산업법) 등
- **(임무중심 R&D)** 국가전략기술 분야 핵심원천기술 확보 위해 K-문샷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출연연을 임무중심 연구소로 개편(Post-PBS)
 - * 예) 암·난치질환 정복, 원자력 추진(SMR) 선박, Beyond HBM 메모리반도체, 핵융합 전력생산 실증('30년대)
 - 출연연 전략연구사업에 기업 수요기반 과제 발굴 트랙 신설
- **(도전형 R&D)** 도전적 연구촉진 위해 평가등급 개편*하고, 실패 확률은 높지만 파급효과가 큰 연구 전용트랙(^{가칭}한계도전프론티어 R&D) 신설
 - * (현행) 목표달성을 중심 4등급 체계(우수/보통/미흡/극히불량) → (개선) 연구과정 중심 정성평가 체계
- **(긴급현안 R&D)** 긴급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특정 분야·부처 간막이 없이 신속 지원할 수 있는 R&D 사업 신설
- **(생활형 R&D)** 소상공인, K-푸드 등 생활형 R&D 추진 ^{30p, 37p} 상술

◇ 디지털자산 제도화 및 활용

【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 마련 등 디지털자산 제도화 】

- 혁신기회 창출, 이용자보호, 통화·외환영향 등 감안 규율(^{디지털자산}^{2단계입법}('26.1분기))
 - 발행인인가제 자본력 등 심사, 준비자산 운용 ^{발행액 100% 이상 유지 등}, 상환청구권 보장
- 2단계 입법 연계 국경간 스테이블코인 이전, 거래 등 규율방안 마련
- 거래 편의성 제고 등 위해 디지털자산 현물 ETF 도입 추진

【 디지털화폐 활용 국고금 관리 선진화 】

- '30년까지 국고금 14을 디지털화폐 활용 집행할 수 있도록 전방위 지원
- ① **(실증)**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기후부} 사업에 예금토큰을 시범 적용해 실증 사례를 창출('26.上)하고, 보조금·바우처 등 추가 사례 지속 발굴
 - * 적격 충전기 구매·설치 확인시 현금화 가능한 예금 토큰을 지급해 부정수급 방지 및 정산기간 단축
- ② **(법령정비)** 블록체인 활용 본격적 지급·결제 위한 법적근거 마련('26)
 - * 시범사업 결과 등을 보아가며 한국은행법, 국고금 관리법 등 개정 추진
- ③ **(인프라구축)** 업추비 등 예금토큰으로 지급·결제 가능한 전자지갑 배포
 - * 디브레인 시스템에 예금토큰 시스템 연계, 디지털화폐 시스템 처리 용량 확대 등

◇ 대한민국 경제대도약을 위한 마스터플랜 마련

- 광복 100주년 2045 대한민국 경제대도약을 위한 국가 아젠다
발굴해 현정부 内 경제대도약 액션플랜 마련('26.上)
 - 관계부처 합동(재경부 주관)으로 경인사연 및 국책연구기관, 민간 전문가 등이 협업하고 산업계·일반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해 수립

< 분야별 핵심 아젠다(안) >

혁신성장 (PM산업연구원)	대외경제 (PM대외정책연구원)	국민균형성장 (PM산업연구원)	민생경제 (PM한국개발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구조혁신 (PM한국개발연구원)
新산업정책 녹색 대전환 혁신인재 양성	新글로벌 경제정책	지방주도성장 모두의 성장 지속 가능한 성장 매력적인 성장	新노동·일자리정책 거시경제 안정	구조혁신 국가인구전략

※ 아젠다는 지속 추가·발굴 계획

- 중장기 도전과제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기획처 주관
가칭 미래비전 2050 수립 ('26)
 - 민관작업반 구성, 중장기전략위 논의, 일반 국민 의견수렴을 위한 플랫폼 구축해 추진

3 전략적 글로벌 경제협력

◇ 對美투자를 미국시장 진출·협력 및 산업역량 강화 기회로 활용

- 한미전략투자공사 및 기금 신설해 對美투자^{2,000억불}, 조선협력^{1,500억불} 지원
- 對美투자프로젝트 연계를 통해 조선·원전 역량강화 및 신시장 창출
 - 국내 조선업 밀집지역內 함정 MRO 클러스터^{*} 조성 (~'30),
韓美 조선협력 센터 구축 등 MASGA 프로젝트 참여 지원
 - 수주정보망 구축, 인력양성, 기술개발, 공동 활용장비 구축, 판로개척 등 지원
 - SMR 특별법 제정 및 클러스터^{*} 지정, 韓美 원전 기업간 공급망 협력 및 제3국 공동진출 등 지원
- * SMR 제작지원센터, 국민성장펀드(원전분야), SMR 핵심기자재 실·검증 R&D 등 지원

◇ 대규모 전략적 경협지원 강화, 국가별 특화 진출전략 수립 등 통상환경 변화 대응

【 대규모 전략적 경제협력 지원 강화 】

- 가칭 전략수출금융기금 신설(특별법 제정, '26.上)해 방산·원전 등 국가간 수주 경쟁이 심화되는 분야의 대규모 프로젝트 지원
 - 수출금융으로 발생한 수혜기업 이익 일부를 전략수출금융기금을 통해 중소·중견기업 등에 투자해 산업생태계로 환류

【 전략수출금융기금 구조 】

- **(재원)** 정부 출연·보증 + 정책금융기관 출연 + 수혜기업 기여금 ('부담금관리 기본법'상 기여금) + 정부납부기술료(수출연계 기술료 등 검토)
 - **(기금운용)** 기금 및 이를 토대로 창출한 레버리지(자펀드)를 통해 수출금융(대출·보증) 및 생태계 발전(지분투자)에 자금 운용
 - **(수출금융)** 수은·무보 지원이 곤란한 대규모, 장기·저신용 프로젝트
 - **(생태계발전)** 수출 연계성이 높은 R&D에 특화^{*}해 펀드를 통한 해당 기업 또는 대·중·소 협작법인 지분투자
- * 수입대체, 기술경쟁력 확보 또는 수익 창출 가능성이 큰 지식재산권 확보 등

- 가칭 전략경제협력추진단*을 신설해 전략경제협력 특사 활동과 대규모 전략적 경협 프로젝트 설계-제안-시행 전주기 지원

* 정상외교 지원을 위해 국가별 경제협력 모델 발굴, 협회·기관, 기업, 컨설팅사 등 민간역량 활용

【 국가별 특화 진출전략 수립 】

- 북미·유럽 AI·첨단기술, 북미·유럽·중동 방산·원전, 아프리카·중동·아시아 인프라, 남미·아프리카·오세아니아 핵심광물 등 국가별 여건 감안 해외진출 분야 발굴
- 우리 기업의 해외조달시장 개척 지원^{*}을 강화하고, 스타트업의 아-태 지역 진출을 위한 APEC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출범('26.上)

* 특화바우처 확대(40→90개사, 3→4천만원), 신규수출유망기업 집중지원 패키지 신설('26.1월), 수출상담회(年2회)

- CPTPP 가입 가능성 모색 및 멕시코* FTA 협상재개 여건 조성하고,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제도개선** 통해 국내 공감대 형성노력 병행
 - * 멕시코외 CPTPP 회원국 FTA 既체결 ** 예) 기금 일몰 10년연장(27.1→37.1월), 출연기업 동반성장평가 우대
- 민간재원을 활용한 개발금융 추진방안을 마련('26.上)해 선진 개발금융기관과 글로벌사우스 인프라·공급망 협력관계 구축

◇ 국내생산 확대, 공급망 안정화, 핵심광물 확보 및 수출통제 대응 등 경제안보 강화

【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 】

-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을 추진하되, 지원대상·방식 등은 효과성·형평성·재정여건 및 체리피킹 방지방안 등 검토해 발표('26.7월)
 - * [지원대상] (미국)이차전지, 태양광셀, 풍력블레이드 등 (일본)전기차, 반도체, 그린스틸, 그린케미컬 등

【 경제안보 및 공급망 안정화 대응체계 강화 】

- 대통령 주재 경제안보 점검회의를 신설해 경제안보 대응체계를 구축
- 공급망안정화委(경제부총리 주재) 중심 자립화*·다변화** 지원 강화
 - * 첨단전략산업 소부장 중소·중견 투자보조금/고위험 경제안보품목 생산보조: 700/146→1,000/291억원
 - ** 국내생산 어렵거나 부족한 품목은 대체처 발굴, 성능테스트, 국내도입 등 전주기 지원
- 재원 다변화*, 특별투자한도(1,000억원) 신설 등 공급망안정화기금 투자 확대
 - * (현행)공급망기금채를 통해 재원 조달 → (개선)수은, 민간 출연 허용

【 핵심광물 확보 및 수출통제 대응역량 강화 】

- (비축) 신규품목 발굴, 비축확대^{100~180일→최대 1년분} 등 핵심광물 비축계획 수립('26.上)하고, 조달청 비축기지를 산단 연계 대형 비축기지로 개편
- (재자원화) 핵심광물 재자원화 활성화를 위한 제도·규제 합리화*
 - * 원료(폐PCB 등)의 순환자원 지정, 할당관세 확대, 수입보증 부담 완화, HSK 코드 검토 등
- (자원개발) 해외 자원개발 지원규모*·대상** 확대
 - * (현행)업체당 1.5 → (개선)3억원 / ** (현행)24 → (개선)38광종(「해외자원개발사업법」 시행령·규칙 개정)

4 생산적 금융

◇ 첨단산업 지원, 국내주식 장기투자 등 자금흐름을 대전환하고, 글로벌 수요 확충

① 국민성장펀드 본격 지원, 자금조달 활성화 등 첨단산업 금융지원 촉진

- (국민성장펀드) AI, 반도체 등 '26년 총 30조원 규모 지원 착수
 - * '26년 분야별 투자계획(안, 조원) : (AI)6.0 (반도체)4.2 (이차전지)1.6 (디스플레이)0.5 (바이오·백신)2.3 (수소·연료전지)0.6 (항공우주·방산)0.7 (모빌리티)3.1 (미디어·콘텐츠)1.0 등
 - 6,000억원 규모 국민참여형펀드 출시^{'26.2~3분기}해 손실의 20%까지 후순위 재정보강, 장기투자시 투자금액 소득공제 및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
-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외부자금 모집, 해외투자 규제완화* 등 운용 자율성 확대 * (외부자금)펀드별 40% 이내 → 50% / (해외투자)CVC 총자산 20% 이내 → 30%
- (금융회사) 금융회사 등이 벤처기업·정책펀드 등 생산적 영역에 자금 대여시 해당 대출채권 대손충당금 손금인정 한도 상향

② 국내주식 장기투자 촉진,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등 코리아 프리미엄 실현

- (장기주식투자 촉진) 국내 주식·펀드, 국민성장펀드 및 기업성장집합 투자기구(BDC)에 투자시 세제혜택을 강화한 '생산적 금융 ISA' 신설
 - (청년형 ISA) 일정 소득(총급여 7,500만원) 이하 청년에 이자·배당소득 과세특례 및 납입금 소득공제 * 청년미래적금, 국민성장 ISA와 중복 가입 불가
 - (국민성장 ISA) 기준 ISA^{비과세 200만원, 초과분 9.9% 분리과세} 대비 세제혜택 대폭 확대
- (기업지배구조 개선) 기업 조직개편시 이사의 행위규범 가이드라인* 발표^{'26.1분기}
 - * 개정 상법('25.7월)상 이사의 충실험의무 준수를 위한 유의 및 참조사항 제시
- (자사주 세제 합리화) 상법개정 연계 세제 합리화 방안 마련('26.上)
 - 자사주 취득·소각·처분을 자산거래에서 자본거래로 일원화해 법인의 자사주 소각·처분 관련 법령간 체계 정합성 제고
 - * (현행)자사주 처분시 처분이익 익금산입^{소각시 익금불산입} → (개선)처분시 처분이익 익금불산입^{소각시 익금불산입}
 - 자사주 취득·처분의 자본거래화에 따른 관련 세법사항 정비
 - * 법인이 자사주 취득시 주주의 자사주 양도대가의 소득구분 등 소득세·상속증여세법 등 정비

- (공정한 시장질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연장·제도화 검토^{26.上}하고, 검찰·법무부와 협력해 불공정거래 신속수사, 수사종결전 제재부과 등 지속 추진

③ 원화국제화 로드맵 마련 및 MSCI 선진국지수 편입 추진

【 원화국제화 로드맵 마련 】

- 외국인의 원화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국경간 원화 지급결제, 역외 원화금융 등 수요 확대를 위한 원화국제화 로드맵 마련(26.上)

【 MSCI 선진국지수 편입 추진 】

- (외환시장) 국내 외환시장을 현행 새벽 2시 종료→개선 24시간 연장 운영하고, 해외지점 및 eFX 인프라 연계 등 야간시간대 거래 여건 확보 병행
 - 자본거래 유형에 따라 신고 완화·폐지 검토하고, 중복 신고 일원화
- (청산·결제) 글로벌 수탁은행이 일정요건 下 개별펀드를 대표해 결제계좌 개설·관리 허용 등 글로벌 결제구조 도입
 - * 외국인 통합계좌(개인투자자)는 개설주체 제한 폐지, 최종투자자별 거래내역 보고주기 완화(월→분기)
 - 국제 표준 기반 거래·결제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고, 당일 CLS(외환 동시결제) 자금을 당일 증권결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인프라·제도 정비
- (계좌개설 편의성) IRC→LEI 식별체계 전환을 지원하고, LEI 발급 확인서(LEI level 1)를 실명확인증표로 인정해 서류제출 간소화
 - * IRC : 한국에만 존재하는 투자자등록번호(금감원), LEI : 법인 식별용 국제표준 등록 ID
- (공매도) 실시간 무차입공매도 적발 시스템(NSDS)에서 자동 제출되는 자료임에도 중복 제출·보고되는 감리자료 면제 등 개선
- (배당절차) 기업가치 제고 우수기업 및 공시우수법인 선정 시 가점 부여 등 개선된 배당절차(배당락일 전 배당결정) 확산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 (장외거래) 신고 방법·절차·사례 등 포함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조건부 주식양도 계약(RSU)의 장외거래 사후보고 추가 허용
- (투자상품 가능성) '26.2월 FTSE Korea 지수선물 ICE Futures(美) 상장, '26.1분기 유럽 Eurex·미주 ICE 거래시간 전면 개방(非중첩시간대 → 제약 無)

◇ 이공계 과학기술인재, AI 인재 등 국내 핵심인재 양성

- (이공계 인재) 이공계 대학(원)생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장학금·연구생활장려금 확대*, 글로벌 연구자로 도약을 위한 융합연구 확대**
 - * [장학금] 10,370명(+1,705명) / [연구생활장려금] 50개이상(+15개교)
 - ** 4대 과기원 이노코어 산학연 공동연구단 확대 등 포닥 지원 강화 : 1,042명(+508명)
- 학·석·박 패스트트랙* 신설, 우수 학부생 발굴·지원(400명, 年2천만원), 박사후단계 지원 확대(1,352→2,000명이상) 등 통해 혁신인재 조기 양성
 - * 통상 최소 8년→5.5년, AI 영재진학 시스템과 연계시 고등학교부터 7.5년만에 박사 배출
- 국가과학자 제도를 도입해 국가 R&D 리더로서 활동할 리더급 우수 과학자·공학자를 20명 선발('26.上)
- (AI 인재) 4대 과기원, 거점국립대에 AI 단과대학 신설* 및 지방 대학과 교육과정 공유 등 통해 권역별 AI 확산 및 AX 핵심인재 양성
 - * '26년 KAIST 및 거점국립대 3개교 우선 추진 → '27년 이후 3대 과기원 등으로 확대

◇ 인구대응 기본계획 수립, 일·가정 양립 및 양육부담 경감 등 저출생 대응 강화

- (인구대응 기본계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가칭인구전략위원회*로 확대·개편하고,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본계획^{'26~'30} 수립('26)
 -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을 통해 인구정책 전반에 대한 대응 강화
-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 경제활동 참여 확대, 인구축소 적응 등 핵심 추진과제 제시
- (일·가정 양립) 근로자·사업주지원을 강화하고, 아이돌봄서비스 확충
- ① (근로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인상(^{기준금액 상한} 220→250만원)하고, 여성 경력단절예방 프로그램* 및 신산업 직업훈련 과정 확대**
 - * (현행)전국 159개 새일센터 중 80개소 → (개선)90개소 / ** (현행)93개 → (개선)99개

② (사업주) 대체인력·업무분담지원금 확대 및 소규모 사업장 추가 지급*

* (대체인력)月120 → 일반130, 소규모140만원 (업무분담)月20 → 일반40, 소규모60만원

③ (아이돌봄) 정부지원 대상 확대(종위200→250%) 및 야간 긴급돌봄 수당 신설(日5,000원)하고, 아이돌봄 자격·등록제('26.4월~) 등 민간 관리체계 구축

- (양육부담 경감) 민영주택 청약시 신생아 특별공급유형 별도 신설하고, 아동수당(月 10만원)을 만8세 미만 → 만9세 미만으로 확대

◇ 외국인력 전략적 활용 및 권익보호 강화 등 통해 생산연령인구 감소 대응

- (우수인재 유치) 해외우수과학자유치 사업 개편*, 세종과학펠로우십 복귀트랙 신설 등 해외우수인재 유치(~'30년, 2천명 유치)

* 연구기관이 책임지고 해외연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5개 기관 지정 + 블록펀딩(年 30억원) 지원

- 정부초청외국인장학생^{GKS} 이공계석박사 비율 확대(‘25 41→‘27 45%)하고, K-STAR 비자트랙* 대학 확대^{5→32개} 및 외국대학 교원 국내대학겸직 특례** 마련

* 통상 6년 소요되는 유학생의 영주비자(F-5) 획득기간을 최소 3년으로 단축

** 외국대학 교원이 국내대학 전임교원 임용시 국내대학장의 허가받아 외국대학 교원겸직 가능 「교육공무원법」 개정

- (유학생의 인재화) 수출직무 전문교육(중기부 K-수출전사 아카데미)을 수료·통과한 유학생에 전문인력 비자(E-7-1) 발급기준 완화 등 특례 부여

- (산업수요 총족) 구조적 숙련인력 부족을 겪고있는 산업분야(뿌리산업 등)에 외국인력 도입 타당성 검증을 거쳐 기능인력(E-7-3) 유치 확대 검토

* 건설기계제조업 용접·도장원, 도축원(기능직군)을 대상으로 E-7-3 비자 시범사업 실시 추진('26.上~)

- (지방수요 총족) 지역특화형 비자* 쿼터 확대(現 '25~'26 12,538명) 및 광역형 비자** 사업(시범사업 중, '25~'26) 본격 제도화('27) 추진

* 인구감소(관심)지역에 거주취업 조건 체류특례 ** 광역 지방정부에 일부 비자요건 설계시 자율성 부여

- (권익보호 강화) 인권침해 실태조사 및 부당 대우시 사업장 변경 요건을 완화하고, 산재·인권침해 사업장은 외국인 고용제한 강화

* 연구용역, 노사·전문가 간담회 등 통해 구체적 방안 확정 → 외국인고용법 개정 추진('26.下)

3. 국민균형성장 및 양극화 극복

◇ 5극3특 체제의 지방주도성장,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 안전이 기본인 지속가능한 성장, 문화가 이끄는 매력적인 성장으로 대전환해 양극화 극복

1 | 지방주도성장

◇ 수도권 1극체제를 5극3특체제로 대전환해 성과 창출

① 지방 산업육성, AX, 인프라 확충, 대학 혁신 등 성장잠재력 제고

【 5극3특 성장엔진 선정·지원 및 메가특구 도입 】

- 가칭 5극3특 성장엔진 선정 및 성장엔진 특별보조금 도입
- 5극3특 성장엔진 연계 메가특구 도입(「가칭메가특구 특별법」 제정, '26.上)
* 기업·지역주도로 규제특례 및 정책패키지 구성·신청시 대통령 주재 위원회에서 메가특구 지정·의결

【 지방 AX 가속화 】

- 인허가 간소화 및 규제 특례 등 특별법 연내 제정* 추진해 지방 중심 AI 데이터센터 활성화 * 복합 인허가 등 일괄처리, 입지·시설 요건 등
- 서남·동남·대경·전북을 시작으로 5극3특 성장엔진 연계 AX프로젝트 확산
* (서남)모빌리티·에너지 AX 위한 실증지원 인프라 조성 (동남)방산·조선·기계 피지컬 AI 구현 (대경)AX연구거점 구축, 바이오헬스케어·로봇 AX 추진 (전북)AI팩토리 테스트베드 마련, AI팩토리 실증

【 RE100 산단 조성 등 지방 인프라 확충 】

- (RE100 산단 조성) 특별법 제정으로 규제·정주지원*, 산단 중 최고 수준 재정·세제지원** 등 산단조성 본격 착수(시범단지 선정·조성계획 발표, '26.下)
* 예) 인허가 간소화, 재생e 조달비용 인하, 산단 인근 임대주택 우선 공급, 외국교육기관 유치 등
** 예) [재정] RE100 산단 입주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한도 및 국고 보조비율 상향
[세제] 산단 내 창업기업에 소득·법인세 10년간 100% + 5년간 50% 감면 등
- (첨단산업 벨트) 남부권 반도체 혁신벨트(광주-부산-구미) 및 배터리 트라이앵글(충청-영남-호남)* 구축 * 이차전지 특화단지 신규지정('26.上)
- (교통·물류망 확충) 5극3특 권역별 단일생활권이 가능하도록 광역 철도 추진, 간선도로망 정비 등 대중교통망 확충
* 예) [철도] 대전·세종·충북 CTX 등 [도로] 광주-강진 및 함양-창녕 고속도 개통 등

- 연안선사도 우수 선·화주 인증 대상에 추가(화주·외항선사→연안선사 추가, 해운법령 개정, ~'26.3분기)하고, 우수 화주기업 세액공제 개편 검토
- (공공기관 이전) '27년부터 이전 시작을 위해 지역별 전략산업 등과 연계한 이전기관·지역별 배분안 등 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 발표('26)

【 지역전략산업 중심 지방대학 혁신 】

- (지방사립대 구조개선) 사립대구조개선법^{*'26.8월 시행} 통해 지방사립대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전략산업 중심으로 특성화해 벤처타운화
 - * 구조개선 절차: 경영위기대학 지정 → 구조개선계획 수립 → 학과 통폐합 등 구조개선 이행
- (인센티브) 학과 재구조화 등 특성화 사립대학에 인센티브* 제공
 - * (일반대) 15개교, 교당 연 50억원 / (전문대) 12개교, 교당 연 20억원 내외
- (창업지원) AI중심대학^{10개교}을 거점으로 지역전략산업의 AX전환을 위한 창업지원 대폭 확대
- (인프라 공유) 거점국립대와 학점교류 및 인프라 공동 활용
 - * ①거점국립대 지역혁신허브화 인센티브 신설(9개교), ②실험·실습기자재 공동활용 지원(9개교)
- (거점국립대 육성) 지역전략산업 유관 대기업·지역 유수기업 연계 취업 보장 계약학과 확대('30년까지 500명 확대) 등 특성화 추진

② 지방 투자 패키지 지원 및 소비 촉진

【 재정·세제·인력 등 지방투자 패키지 지원 】

- (재정)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한도를 상향*하고, 글로벌 기업이 비수도권 투자시 현금지원 한도를 외투금액의 10%p 가산**
 - * (현행) 투자 건당 150, 기업당 200 → (개선) 균형발전하위지역·산업위기지역: 건당·기업당 300억원
 - ** 예) 비수도권 1,000억원 투자시 현금지원 한도 : (현행) 400억원 → (개선) 500억원
- (세제)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법인·소득세 감면기간을 낙후도에 따라 확대(7~12→8~15년)하고, 사업목적 부동산 취득시 취득·재산세 감면*
 - * 예) 과밀억제권역→지방이전시 법인 취·등록세 100% + 재산세 5년간 100%(추가 3년 50%) 감면
- (인력) 지역고용촉진지원금 범위를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확대*
 - * (현행) 고용위기지역 지정시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1년 月임금 최대 50%) → (추가)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

【 지방 소비 촉진 】

- (소비 지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26·24조원 목표), 국비보조율 상향 (수도권 2→3%, 비수도권 2→5%, 인구감소지역 5→7%) 및 활성화 기본계획(‘26~‘30 수립)(‘26.6월)
 - 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 상호보완적 운영방안 마련
- (국내여행 활성화) 근로자 10만명 반값휴가 지원(정부¹⁰·기업¹⁰·근로자²⁰만원 휴가비 적립)하고, 지역사랑 휴가지원(경비 50% 환급, 20곳 선정) 3월 개시
 - 연박^{2박이상시 최대 7만원 할인}·섬^{최대 5만원 할인} 숙박할인권 4만장 등 비수도권 숙박 쿠폰 20만장 신규 발행하고, 지방 공연·전시 지원 3배 확대(400→1,200회)
 - 남부권(광주, 전남, 부울경) 체류관광 확대를 위해 K-관광 휴양벨트 광역관광 개발사업 추진(60개 개발사업)

③ 재정·세제·금융·조달 등 전방위적 지방 차등·우대지원 제도화

- (재정) 7대 시범사업 + α 재정사업*을 지역별 차등지원
 - * 아동수당, 노인일자리,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창업사업화 지원, 중소기업혁신바우처 + 정액패스, 청년문화패스 등
 - 지역발전 수준 등을 반영한 차등지원지수를 개발·활용해 지역별 차등지원 확대·제도화
 -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10개군, 1인 月15만원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추진 및 단계적 확산(‘농어촌 기본소득에 관한 법률」 제정, ‘26.上)
- (세제) 지역별로 세제지원을 차등하는 방안 마련(~‘26.7월)
- (금융) 국민성장펀드를 지방에 40% 이상 지원하고, 지방 정책금융 단계적 확대(‘25年 100→‘28 125조원) 및 지방전용펀드 年 2.5조원 조성
 - 규제개선과 지방상품 출시 유도를 통해 은행의 지역금융 확대*
 - * ①(규제)지방 대출 예대율 규제 완화: (예) 기업(85%→80%), 개인사업자(100%→95%)
②(상품)지방은행-인터넷은행 공동대출을 개인 → 중소기업·개인사업자 등 확대(‘26下)
- (조달) 국가·지방·공공기관 계약제도를 개선해 지역업체 수주 확대
 - * ①적격심사낙찰제·종합심사낙찰제·기술형입찰시 지역업체 입찰·낙찰시 가점 확대 등 우대 강화
②지자체/공공기관의 지역제한경쟁입찰 허용금액 확대(현행 100/88억원 → 개선 150억원 미만)

④ 사회연대경제 강화로 자생적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 (법적기반)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을 제정하고, 사회연대경제발전委 중심 중앙·지방정부 협력을 통한 통합 추진체계 구축
- (사회연대금융 활성화) 사회연대경제조직에 대한 미소금융 등 자금 지원, 신·기보 보증 확대 등 사회연대금융 활성화
- (성장지원)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사회연대경제조직 재정·금융 지원 및 공공사업 참여를 확대하고, 국유재산 이용 개선

- ① (협동조합)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설립초기 컨설팅·사업화 → 상품개발 등 협동조합 고도화)
- ② (사회적기업·마을기업) 사회적기업(284 → 1,180억원), 마을기업(17 → 53억원) 예산 대폭 확대
- ③ (소셜벤처) 펀드^{(26~30)0.2조원 조성}·보증^{(26~30)0.75조원 목표} 등 금융지원 확대, 「소셜벤처법」제정 검토
- ④ (사회주택 참여확대) 공공임대주택 운영참여 범위 확대(매입형 → 매입·건설형)
- ⑤ (국유재산 이용개선) 국유시설 사용료 감면^{(재산기여)2.5→1%}, 사용허가 제도개선(공익목적시 수의계약 등 허용)

2 모두의 성장

◇ (中企) 상생·공정성장 질서 구축 등 중소기업 성장 촉진

① 경제외교 성과환류 등 大·中企 상생성장 및 中企 글로벌 진출 확산

- (상생 성장전략) 경제외교 성과를 중소기업 생태계 전반으로 환류·확산하기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전략 마련('26.1분기)

- ① (직접적 성과공유·확산) 大·中企 對美 투자프로젝트 동반진출 지원을 2배 확대*하고, 상생금융프로그램** 확대(현대·기아차 사례: 1→1.3조원)·확산

* (현행)3년간 최대 10억원 → (확대)3년간 최대 20억원 + 보증 200억원 연계

** 대기업·금융권 출연 + 신·기·무보 등 보증 → 협력사 지원

- ② (환류경로 강화) 中企 협동조합에 협의요청권을 부여하고, 성과 공유제 확대* 및 상생협력기금 1.5조원^{**'26~'30} 이상 조성

* (현행)제조업 중심 수·위탁거래 → (개선)플랫폼·유통업·대리점업 등 모든 거래(「상생협력법」개정, '26.上)

** (현행)최근 10년간 年평균 약 2,500억원 수준 → (개선)향후 5년간 年평균 3,000억원

- ③ (상생 생태계 확장) 배달플랫폼의 입점업체 수수료부담 완화 방안 검토 등 상생 생태계를 제조업에서 플랫폼·금융·방산 등으로 확장

- (지식·기술협력 확산) 기술나눔* 활성화 위해 동반성장지수 평가 우대 등 인센티브 방안 마련 * 대기업공공기관 미활용 기술 중소중견기업 무상이전·사업화지원
- (중기 글로벌진출 지원) 「^{가칭}중소·벤처 해외진출 촉진법」 제정해 지원 체계 완비*하고, 신사업전략·사업화·고도화 등 글로벌 도약 종합지원**
 - * 중기진흥법, 판로지원법 등 개별법을 통합·일원화해 원스톱 지원 및 사각지대 해소
 - ** ①신사업전략 등 디렉팅 ②사업화지원(3년 7.5억원) ③투자유치 ④수출금융·R&D 등 / 100→500개까지 확대

②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지원 강화, 기술탈취 방지 등 공정거래질서 확립

【 불공정 거래 해소 】

- 납품대금연동제를 확대 주요 원재료→에너지경비 포함하고, 현장 안착 위해 우수기업에 대한 수위탁 직권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 확대 추진
- 공공하도급·민간건설하도급에 상생결제 등 전자대금지급시스템 단계적 의무화*하고, 대규모 유통업자의 대금 지급기한 단축(現 40~60일)
 - * (현행)공공건설 하도급 → (개선)제조·용역 분야 공공하도급 및 민간건설하도급 전체로 단계적 의무화
-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정액 과징금 상향
 - (최대 20→50억원, 하도급법 개정안 마련, '26.上)
-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피해구제기금* 설치를 위한 방안 마련('26.上)
 - * (재원)불공정거래 관련 공정위 징수 과징금(수납액 기준 年 5,000억원 수준) 일부(20% 이내) (용도)소송지원, 분쟁조정지원, 자금지원, 피해예방 및 권익증진 등

【 기술탈취 대응 강화 】

- 행정제재·과징금 대폭 강화 등 기술탈취 기업 제재 3종 패키지 도입
 - * ①(행정제재)시정권고 → 시정명령·벌점·과징금 등 ②(과징금 도입)최대 50억원 ③(손해액 산정)기술개발에 소요된 비용도 포함 <기술보호법 개정, '26>
-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및 공정위·중기부 자료제출의무 도입('26.下)

◇ (벤처·창업) 벤처·창업 활성화 및 실패가 성공의 자산이 되는 재도전 생태계 구축

① 벤처 단계별 세제지원, 코스닥 활성화 등 벤처·창업지원 확대

- (모태펀드) 모태펀드 존속기간 연장 및 재정출자 확대(1.0→1.6조원)

- 연기금·퇴직연금 등 민간이 출자 가능한 국민계정 신설* 및 모태펀드의 위험손실 부담방안 마련(26.3분기)

* (현행) 10개 부처가 19개 계정에 재정 출자 → (개선) 연기금 등이 출자하는 '국민계정' 추가

- (세제지원) 벤처창업·성장·회수 단계별 4종 세제지원

- ▶ (창업) ① 인구감소(관심) 지역에서 일정규모 이상 고용 창출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시 세액공제율 상향(신주 투자액의 5→7%)

- ② AI 등 신산업 분야 청년 창업기업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 확대
(現 5년간 비수도권 100%, 수도권 75%, 수도권 과밀역제권역 50%)

- ▶ (성장) ③ 창업 후 유상증자 시 개인법인에 대한 벤처투자 세제지원 요건을 창업 후 7→10년 이내로 확대

- ▶ (회수) ④ 벤처기업 지속 투자를 위해 일정요건을 만족한 세컨더리투자도 양도차익 비과세

- (코스닥 경쟁력 강화) 맞춤형 기술특례상장 도입, 코스닥벤처펀드 공모주 우선배정(25→30%) 및 투자금 소득공제 한도 확대*

* 소득공제(투자액의 10%) 적용 투자액 한도 : (현행) 1인당 누적 3천만원 → (개선) 매년 2천만원

- 상장폐지 요건 강화, 엄정한 심사 등 통해 부실기업 신속 퇴출
 - 연기금 기금운용평가 기준수익률에 코스닥지수 반영(1월중 비율 발표)

-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소액으로도 벤처·혁신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공모펀드를 출시하고,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 적용

② 경영 단계별 재도전 생태계 구축

- (경영위기 단계) 신속한 정상화를 위해 구조개선자금 지원(²⁶2,000억원)

- (사업정리 단계) 연대책임 제한을 신기술금융회사·조합 등까지 확대*하고, 중소기업이 발행하는 P-CBO에 대한 연대보증을 면제**

* (현행) 모태출자조합, 벤처투자회사조합, 창업기획자, 개인투자조합 → (추가) 신기술금융회사·조합

** 중소기업 P-CBO 신규발행시 연대보증 미적용하고, 기존 채무는 만기시 순차적으로 연대보증 면제

○ (재도전 단계) 보증·융자·펀드 등 자금공급 대폭 확대

- * (보증) 재기지원 특례보증을 신설해 기술보증 변제 실패 기업인 재지원
- (융자) 회생기업 전용자금(年 50억원) 지원 범위를 회생종결 → 회생인가 기업까지 확대
- (펀드) 1조원 규모 재도전 펀드 공급(^{21~25} 1,500억원 → ^{26~30} 1조원, 약 7배)

◇ (소상공인) ‘생활형 R&D’ 등으로 역량 강화 및 위기극복·재기지원

【‘생활형 R&D’ 통한 역량 강화】

○ ① 레시피 개발 예: 지역 대표 음식, ② AI 로봇 요리 예: 고기굽기, ③ AI 홍보, ④ AI 상권분석 등 소상공인 맞춤형 생산성 제고

* 소상공인 AI 활용 지원: ① 제품개발 ② 자동화 공정개선 ③ 홍보·디자인 ④ 판로개척 등 모델 설계·사업화 지원

- 신규 아이템(레시피 등) 경진대회 등 봄업을 일으키고, 연구용역 등 통해 소상공인 생산성 제고 방안 마련('26.上)
- 소상공인들이 협동조합을 통해 신제품·기술개발, 공정개선 등 공동 사업 개발 및 판로개척 시 정부매칭 지원(80개 조합, 최대 3억원 이내)

【 규모화 통한 경쟁력 제고】

- 지역의 문화·산업·관광 자원과 접목해 앵커스토어 중심 글로벌 상권(17곳) 및 로컬 거점상권(50곳) 조성(~'30)
- 로컬 창업가 1만개사 발굴해 로컬 기업가 年 1천개사 육성하고, 로컬 창업타운을 통해 교류·협업·정보공유 등 지원('26년 2개소)

【 위기극복·재기지원】

- (경영위기 단계) 전체 대출 소상공인(약 300만명) 대상 매출·신용정보 등 활용 위기징후 모니터링 체계 구축하고, 선제 안내·지원('26.6월~)
- (사업정리 단계) 폐업(예정) 소상공인에 대한 은행권 저금리 철거지원금 대출을 신설(최대 600만원, 만기 1년)해 철거비 先대출-後정산 지원
- (재기 단계) 새출발기금 성실상환 소상공인에 인센티브 신설(예: 채무잔액 추가감면 또는 이자율 인하)하고, 재기지원 카드상품 신설*

* 중·저신용 소상공인 핫살론 신용카드(월 300~500만원 한도) 발급('26.1분기) 등

◇ (청년) 고용·자산형성·생계비 경감 및 금융지원 강화

- (고용) AI 현장 실무인력 양성과정* 신설(1만명, 6개월)하고, 실무 중심의 일경험 제공 및 구직촉진수당 상향**

* 훈련비 전액지원 + 훈련장려금 月20만원 + 특별수당 月20~60만원(수도권20/비수도권40/인구감소지역60)

** 일경험민관협력 인턴프로젝트형 등 일경험 기회 제공(4.3만명) /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상향(50→60만원)

- 비수도권 취업 청년 근속장려금 지급* 등 장기근속 유도

* 청년이 비수도권 소재 기업 취업·근속 시 인센티브 지원(2년 최대 720만원)

- (자산형성) 청년미래적금*을 도입해 납입금에 대한 재정매칭과 이자소득 비과세로 3년간 최대 2,200만원 자산형성 지원

* 만19~34세 대상^{연소득 6,000만원이하 또는 연매출 3억원이하 소상공인} 납입금(50만원 한도)의 6/12%^{증기 재직자 및 영세소상공인}를 매칭지원 + 이자소득 비과세 <개인소득 6,000~7,500만원 이하는 재정 매칭없이 이자소득 비과세만 적용>

- (생계비 등) 무주택 청년 월세지원(20만원, 24개월)을 계속사업으로 전환하고, 연구용역 통해 지원대상 확대 추진

- 19~20세 대상 청년문화패스^{공연·전시·영화} 지급(^{수도권 15/ 비수도권 20}만원)

- (금융) 4.5% 미소금융 청년상품 시범도입해 청년 사회진입 준비 자금 지원(최대 500만원, 만기 5년)

◇ (중·고령층) 중장년일자리 확대, 다층적 소득보장 등 노후소득 보강 기틀 마련

【 2차 베이비붐 세대 은퇴연령 진입 등에 대응해 중장년 일자리 확대 】

- 구직생애경력설계 서비스대상을 0.3만명 확대^{5.3→5.6만명}하고, 재직 1:1맞춤형 경력설계상담서비스 다각화 및 재취업지원 의무사업장 단계적 확대*

* (현행)1000인 이상 → ('27)500인 이상 → ('29)300인 이상

- 사회적 논의 통해 단계적 정년연장 추진하고, 고령자통합장려금 (月 30만원<비수도권 40만원>, 최대 3년) 지급 및 세대상생 고용 추가지원* 추진

* 세대상생 고용기업 지원방안 연구용역(고용부, '26)을 바탕으로 지원 대상·수준 등 결정

【 다층적 소득보장체계 구축 】

- **(기초연금)** 연금특위 논의를 거쳐 저소득 부부가구 대상 부부감액 (각각 20%) 단계적 축소('27.上~) 등 정책효과 점검 및 개선방안 마련('26)
- **(국민연금)** 소득활동에 따른 감액을 축소^{*}하고, 저소득 지역가입자 (월소득 80만원 미만)에 대한 보험료 지원 등 사각지대 완화
 - * (현행)소득이 평균소득월액^{'25년 309만원} 초과시 5구간으로 감액 → (개선)1,2구간 감액 폐지('26.6월)
- **(퇴직연금)** 수급권 보장 등 위해 사용자 적립의무 이행률^{*}을 높이고, 기업 규모별 퇴직연금 단계적 도입의무화 추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 추진^{'26.下})
 - * (현황)DB형 도입 사업장 44.6%가 최소적립금 미충족 → (개선)지도·감독, 과태료 부과 등 적극 실시
 - ** 퇴직연금 도입 이행력 확보 방안(미도입 사업장 과태료 부과 등) 및 행·재정적 지원방안 검토
 - 가입자 선택권 확대를 위해 노사정 TF, 국회 연금특위 등 사회적 논의를 거쳐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활성화(연구용역 진행중, '25.11월~)
- **(주택연금)** 산정방식 개선, 취약 고령층 지원 강화^{*}, 실거주 요건 완화^{**} 등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 마련('26.1분기)
 - * 현 시가 2.5억원미만 주택은 추가지급 ** 현 질병치료·실버타운 입주 등 실거주 예외인정

◇ (서민) 금융지원 및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기초생보 확충 등 취약계층 지원 보강

① 금리인하 등 포용금융 확대 및 금융소비자 피해 방지

【 포용금융 확대 】

- **(정책서민금융 확대)** 저금리 서민금융 확대해 고금리 부담구조 해소
 - ❶ 4.5% 취약계층 대출 신설해 사회적배려대상자·불법사금융예방대출 완제자 지원(최대500만원, 만기 5년)
 - ❷ 3~4% 소액대출 규모를 3배이상 확대해 채무조정 성실이행자 지원(최대1,500만원)
 - ❸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실질 금리부담을 6.3%로 완화하고, 사회적배려대상자는 5%로 추가 인하
 - ❹ 금융권의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확대(年 4,348→6,321억원)해 핫살론 특례보증 금리 인하
- **(금융회사 서민금융 강화)** 성실상환자 제도권 금융 안착 위해 크레딧 빌드업 체계 구축^{*}, 금융회사 이익으로 중금리 대출공급 확대^{**}
 - * ❶불법사금융 대출 완제시 미소금융 지원해 금리인하(6.3→4.5%).한도상향(100→500만원)
 - ❷미소금융 완제 또는 성실상환시 징검다리론 이용을 지원해 서민금융 출입 유도
- ** 은행 새희망홀씨 대출(3.5→6.0조원) 및 인뱅 중·저신용자대출 신규취급목표(30→35%이상) 점증적 확대

【 금융범죄 근절,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

- (금융범죄 근절) 불법추심 즉시중단을 위한 초동조치 강화* 및 원스톱 불법사금융 종합·전담 지원체계 구축**('26.1분기)

* 금감원 불법추심 중단요구 및 법적조치 구두경고, 금감원장 명의의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확인서 발급

** 서금센터 전과정 지원 금감원 추심중단 요구 법률구조공단 채무자대리인 지원 금융회사 불법계좌 차단 경찰 수사

- 금융·통신·수사영역 간 보이스피싱 의심정보 공유하고, 사전예방 번호
긴급차단 등부터 피해구제 금융사 무과실책임제 도입 등 까지 전 주기 대응 강화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등 개정 추진('26)

- (금융피해 구제강화) 소액분쟁 편면적 구속력* 도입

* 소액분쟁시 소비자가 금융분쟁조정委 결정을 수용하는 경우 금융회사에 결정 준수 의무화

② 저소득층 최저생활 보장 및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

【 기초생활보장제도 확충 등 저소득층 지원 강화 】

- (기초생보 강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27),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 ('26) 및 부양의무자 기준 고소득·고재산자만 적용토록 단계적 완화('27~'30)

* (현행)부양의무자 연소득 1.3억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 초과시 수급 탈락 →
(개선)노인·장애인 등 근로취약계층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기준중위소득을 '26년 역대 최대 6.51%^{4인가구} 상향하고, 최저생활 보장, 재정지속가능성 등 균형있게 달성토록 산정방식 개편(~'26.7월)

- (근로 인센티브 제고) 저소득 근로가구 소득보전과 근로의욕 제고 위해 EITC 제도 효과, 지급요건·기준의 적정성 등 개선방안 마련

- (자산형성) 근로능력있는 저소득층^{수급자·차상위 등}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희망저축계좌 금리인상(최대 4.5→5%), 적립유예기간 연장(6→12개월)

【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 】

- (신청주의 개선) 사각지대 해소 위해 복지급여 자동지급화 단계적 전환

* 예) 부모급여·첫만남 이용권·아동수당 등 보편·현금지급 제도를 우선적으로 자동지급 전환 추진

- (AI기반 복지강화) 위기가구 발굴·상담 고도화, 돌봄 서비스 질 제고 등 촘촘한 복지체계 구현을 위해 복지·돌봄 AI 혁신 계획* 수립('26.上)

* 고독사 예방을 위한 AI 심리케어 서비스, 24시간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AI 스마트홈 등

- (1인빈곤 대응) 현행 복지제도 1인가구 지원효과 등 점검·개선방안 검토

◇ 안전투자 인센티브 확대 및 책임·제재·감독 강화 등 산업안전관리 강화

【 재정·세제·금융·조달 등 전방위 안전투자 인센티브 확대】

- (재정) 산재예방사업 재정지원을 확대(‘²⁵1.3→‘²⁶1.6조원)*

* 10인 미만 영세사업장 안전장비 재정지원 확대(70→90%), 산재예방시설 융자 확대(4.6→5.4천억원) 등

- (세제) 안전설비 투자 세제지원 3종 패키지 추진

① (범위 확대) 안전설비 투자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범위 확대

* (적용대상) 해당 기업 노동자 외 도급, 특고, 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시설도 포함

(적용시설) 법령상 의무시설 외 AI 등 신기술 활용 안전시설(예: AI 관제시스템, 안전감지용 드론) 포함

② (공제율 확대) AI·로봇 등을 활용한 첨단 안전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해 연구개발 및 관련 시설투자 세제지원 확대*

* 연구개발공제율(%): 일반 2~25, 신성장·원천기술 20~40 / 투자세액공제율(%): 일반 1~10, 신성장·원천기술 3~12

③ (가속상각) 중소 안전설비투자 가속상각 도입(기준내용연수 50% 단축)

- (금융) 산업안전 시설투자 정책금융 공급 1조원 확대(3.6→4.6조원)

- (조달) 발주·입찰·계약·시공 등 전단계 안전투자 지원 강화

▶ (발주) 고위험 공사(리튬배터리 교체 등) 발주방식을 일반경쟁입찰→실적제한입찰로 개선

▶ (입찰) 물품·용역 등 공공입찰 전 분야에서 중대재해 발생기업에 대한 폐널티 신설

* 쇼핑몰 등록 배제, 물품·용역 적격심사 감점, 우수제품 지정심사 감점 및 지정 연장 배제 등

▶ (계약) 기술형입찰 유찰 후 수의계약 전환시 협상기준가격(가격상한) 현실화

* (현행) 종합심사낙찰제 공사 평균낙찰률 반영 → (개선) 종합심사낙찰제 및 기술형입찰 공사 평균낙찰률 반영

▶ (시공) 공공공사 간접공사비 산정기준을 강화해 공사현장 안전관리 기반 확충

* (현행) 간접공사비 산정시 공공·민간공사 원가 모두 활용 → (개선) 원가가 더 높은 공공공사 원가 활용

【 책임·제재·감독 강화】

- (책임) 적정공기·공사비 제공, 안전보건조정자 역할 강화 등

발주·설계·감리 등 건설공사 전과정 주체별 안전관리 책임·역량 강화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및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추진(‘26.上)

- (제재) 안전책무 등 위반 사망시 과징금 부과 신설(‘26.上 법 제·개정 추진)

*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사망사고 다수·반복 발생시 과징금 부과(영업이익 5%)

「건설안전특별법」 안전관리 의무 위반해 사망시 건설사에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매출액 3% 상한 1천억원)

- (감독) 산업안전보건 분야 감독관 확대(1,445→2,095명), 패트를 등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 중심 감독 대폭 확대(2.4→5만개)

【 안전관리 제도적 기반 확충 및 안전관리비 반영 확대 】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에 건설현장 화물차주, 방과후 강사 등을 추가해 안전보건 사각지대 축소(산업안전보건법령 개정, ‘26.上)

* 특고·플랫폼종사자 등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확대 지속 추진

- 노동자 작업중지요구권 신설 및 작업중지 행사요건 완화^{*}하고, 국민참여형 포상금 도입해 산재위험 신고자에 최대 500만원 지급

* (현행)산재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 (개선)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우려되는 경우

- 건설기술진흥법상 안전관리비가 공사비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안전관리비 산정기준 명확화 위한 매뉴얼 제정(‘26.6월)

- 실태조사, 노사 의견수렴 등 통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단계적 인상 검토

◇ 공정 보상,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 보장 등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

【 공정한 보상 확립 】

-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원칙을 법제화하고, 임금정보 조사 확대(표본 3.3→6.6만개) 등을 통해 임금분포 등 정보 제공 강화

- 고용평등임금공시제 도입해 임금·고용의 성별현황·구조 체계적 공개

* 공공·민간 임금·고용정보 공시제도 법적근거 마련 및 공시 시스템 구축 추진(‘26~)

- 임금체불 등 근로감독 확대(5.4→14만개소, ~‘27)하고, 법정형 상향(정역 3→5년이하) 및 도산시 대지급금 지급범위 확대(최종 3개월→6개월분 임금) 추진

【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 보장 및 개정 노조법 현장 안착 】

-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 제정('26.上) 및 지원 강화*
 - * (권익보호) 현장 밀착형 민간 노동센터 활용 노동법 상담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전국 30개소)
(근로복지) 플랫폼 노동자 휴게시설, 복지 물품 지원 등 취약노동자 일터개선 지원
- 사회적 대화 등을 통한 공감대 下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방안 마련(적용확대 조항·시기, 사업주 지원 등)
- 유사한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를 통합해 고용창출·노동조건 등 종합지표 개발* 및 행복한 일터 인증제 신설
 - * 취약계층 고용, 일·생활 균형, 적정임금 지급, 갑질·괴롭힘 없는 건전한 기업문화 등 종합 고려
 - 행복한 일터 인증기업에 공공계약 심사 가점*, 세제 인센티브 신설 검토
 - * 예) 조달청·지자체 입찰 적격심사시 가점 부여 등
- 일·생활 균형 및 일하는 방식 혁신을 위해 노사정이 공동 선언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의 후속 입법·재정지원* 등 추진
 - * 「실근로시간단축지원법」 제정, 주 4.5일제 도입 등 사업장 정부지원 신설(720개소, '26) 등
- 사용자성·노동쟁의 범위 등을 현장에서 신속·정확하게 판단토록 지원하고, 취약기업 교섭컨설팅, 모범사례 확산 등 개정 노조법 현장 안착 추진

4 문화가 이끄는 매력적인 성장

◇ K-컬쳐를 핵심 성장 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고, K-관광 3천만명 조기달성

【 게임·푸드·뷰티 등 K-컬쳐산업 육성 】

- (게임) 인디게임 기획·개발 지원 등 게임제작 생태계 저변을 확대하고, 신시장 수출 전략수립·현지화 지원* 등 수출국 다변화 추진
 - * 해외 출시예정 게임 대상 글로벌 권역별 이용자 평가 및 환류 지원
- (푸드) 시장별 전략 K-푸드 선정, 중동·아프리카 등 유망시장 진출 확대*, K-이니셔티브 융합 마케팅 및 원스톱 기업애로 해소 등 추진
 - * 할랄 상호인정 확대·인증 지원 및 국제식품박람회(Gulfood 등) 참가 지원 확대 등

- 대체식품 등 해외수요 증가 유망분야 생활형 R&D 투자 및 개발기술 기업이전·사업화 지원 등을 통해 푸드테크 산업 육성
- (뷰티) 뷰티 서비스 수출활성화 지원방안 마련('26.下)*, 수출거점 조성 ('시범지역 2곳, '26.下) 체험·마케팅·문화·관광·수출 융합 및 코리아뷰티페스티벌** 개최('26.6월)
 - * 예) 법인설립·결제 등 규제개선, 인증 등 서비스 표준화, 보증·금융지원, 수출모델 발굴 등
 - ** 의료·웰니스, 메이크업, 헤어 등 K-뷰티 토탈 체험·이벤트 부스 운영 등
- (해외진출 기반강화) 韓中 장관급 회의체* 계기 韓 영화 중국 개봉 및 게임 판호 발급 확대 추진
 - * 한중 경제장관회의('26.1분기, 잠정), 한중 상무장관회의('26) 등
- 대외경제장관회의 범위확대^{문체부 추가} 등 경협수립 단계부터 한류연계 강화
- K-산단 성공사례(예: 베트남 흥옌성)를 발굴·확산*해 기업 진출기반 마련
 - * 예) 산업·기술·문화·인재·투자를 하나의 생태계 내 구현하는 전주기 플랫폼
- (지재권 보호) 한류편승상품 실태조사(K-브랜드 침해 빈발 10개국), 현지 권리확보·단속 등 해외 지재권 보호지원 확대
 - 국내·외 위조상품('작통') 유통 차단을 위한 정품 인증체계 구축('26.下)
- * 위조방지기술(AI 워터마크 등) 적용, 휴대폰 카메라 통한 K-브랜드 정품인증 확인 기술개발 추진 등

【 K-지역관광 토탈패키지 본격 추진 등 K-관광 3천만명 조기달성 】

- (K-지역관광 토탈패키지 본격 추진) 수도권 외 글로벌 수준 인바운드 관광권 육성 위해 행정구역 경계를 넘어 관광지 중심 통합·연계 지원
 - * (현행)행정권역 단위 개별·분절 지원 → (개선)여행자 동선 고려 '관광권'으로 사업지원 단위 재편
- 5국3특과 연계해 '26년 2곳内外의 관광권을 선정(수도권 제외)해 범부처 사업 연계, AI 기반 지역관광 실증, 규제특례 등 집중 육성
- (방한관광 지원) 동남아 등 6개국 단체객(중국·베트남·필리핀·인도네시아·인도·캄보디아) 비자발급수수료 한시면제 연장(~'26.6월)
 -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국 확대(4→18개국) 등 입출국 절차 신속화, 교통·관광지 입장권 통합패스 개발 등 결제 편의 제고

4. 대도약 기반 강화

◇ 전면적 규제개혁, 한국형 국부펀드 신설 등 적극적 국부창출 실행, 재정 등 구조 혁신을 통해 경제대도약 기반 강화

1

규제개혁

◇ 첨단산업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고, 데이터 등 신산업 규제 완화

【첨단산업 규제 개선】

- 지방투자 연계, 공정위 심사 등 전제 일반지주회사 증손회사 의무지분율 완화^{100→50% 이상}, 금융리스 필요 최소한 허용(「국가첨단전략산업법」개정안 마련^{26.1분기})

【데이터 공유·활용 확대 등 신산업 규제 완화】

- (데이터 활용 기반조성) 가명처리 전문기관 처리 데이터는 가명·의명정보로 추정해 적정성 판단에 대한 법적리스크 최소화(「개인정보보호법」 개정, '26)
 - 반복·중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는 과징금 대폭 상향(매출액 3%→최대 10%)하고, 예방 투자기업에는 과징금 감경 등 인센티브 부여*
 - * 예) 추가적 암호화, 다중인증, 접근통제 등 강화된 안전조치 채택시 제재 감경
 - 데이터경제 본격화 위해 데이터 활용 관련 규제혁신 방안 마련(26.上)
- (AI 학습데이터 활용 확대) 의료분야 데이터스페이스* 구축 및 문화 분야 AI 학습용 데이터 개방 확대** 등 분야별 데이터 유통·공유 활성화 지원
 - * 병원, 의료AI기업 등 참여자가 보안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공유하고 수익을 배분하는 플랫폼
 - ** 박물관(유물정보), 관광공사(관광정보), 언어자료(한국어말뭉치), 국약자료(디지털음원) AI 학습용 구축 및 개방량 확대
 - AI 학습용데이터 구매비용을 R&D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 (규제샌드박스 실효성 제고) 8개 규제샌드박스 통합관리, 법령정비 의무 강화, 상용화 중심 성과관리 등 규제샌드박스의 신기술 상용화 촉진
 - * 6개 부처가 8개 분야를 분절적 운영해 심의·실증·법령정비 지연 → 신산업·신기술 규제특례법 제정(26.上)
- (서비스산업 애로해소) 관광·모빌리티·유통 등 서비스산업 新시장 창출·진입 저해 규제개선 등 서비스산업 현장애로 해소방안 마련(26.上)

◇ 기업 투자·성장 촉진을 위해 지원절벽 완화 등 기업규모별 규제 전면 재검토

- 中企 출입시 일정기간 기존 세제지원 받을 수 있는 점감구간* 신설 검토하고, 中企 지원체계의 성장촉진형 개편방안 마련('26.下)**
 - * (현행)R&D·투자 세액공제에 점감구간 존재 → (개선)그 외 세제지원에도 점감구간 신설 검토
 - ** 연구용역('26.上, 기재중기부)을 통해 中企 성장유형별(예:고속성장, 성장유지, 성장정체, 성장하락) 지원방안 마련
- 관계부처 TF 통해 기업 투자·성장을 저해하는 기업규모별 규제를 발굴해 규제별 대상·기준·규제내용 등 재검토

◇ 경제형별 30% 개선을 목표로 분기별 방안 마련 등 경제형별 합리화 신속 추진

- 기업의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억제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형벌보다는 과징금·손해배상책임 등 금전적 책임성 강화
- 행위 수준에 비해 과도하게 부과되는 형벌 규정을 합리화*하고, 배임죄 개선방안 상반기까지 마련

* 형벌 구성요건 축소, 감경·면제 조항 신설 및 생활밀착형 경미한 의무위반 과태료 전환 등

※ [1차 방안]^{'25.9.30]} ①선의의 사업주(주의의무 다한 경우 면책규정 마련<최저임금법>) ②증기·소상공인(비료포장지 혼순사 징역·벌금→과태료) 등 일반국민 부담 완화 중심 110개 경제형별 규정 정비

[2차 방안]^{'25.12.30]} ①금전적책임성 강화(하도급대금 미지급 과징금 상향) ②사업주 형사리스크 완화(온실가스배출서류 지연 벌금→과태료)
③민생경제 부담완화(캠핑카 투닝검사 미수검 벌금→과태료) 등 3대 방향 중심 331개 규정 정비

2 적극적 국부창출 실행

◇ 한국형 국부펀드 신설 및 국유재산·국채관리 강화

【 한국형 국부펀드 설립 】

- 재원·투자·구조·운영체계 등을 구체화한 추진방안 마련('26.上)
 - (재원) 정부 출자주식*·물납주식의 현물출자, 지분취득 등을 통해 초기자본금 20조원 규모 조성 및 추가 재원조달 방안 검토
 - * 정부 출자 공공기관의 정부지분 50% 이상 유지 + 법정 주주제한 준수 범위내 출자
 - (투자) 출자주식 배당금, 물납주식 현금화 등 활용 투자규모 점진적 확대

- (구조) 독립적 의사결정 등 투자 자율성·전문성 보장 구조 마련
- (체계) 국부의 관리·운용·투자를 전담할 기구 설치 등 법적근거 마련

【 국유재산 관리 강화 】

- (거버넌스 개편) 300억원이상 매각은 국무회의 보고·의결후 국회 사전보고, 50억원이상은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민간위원 확충, 10→13명) 등 보고·의결
- (헐값·특혜매각 차단) 할인매각 원칙금지, 수의계약 요건* 삭제·정비
* (삭제) 2회이상 유찰, 인접지 매각 (정비) 5년이상 농지대부자, 건물점유 매각 <국유재산법 시행령>
- (투명성 제고) 입찰정보는 매각 의사결정 즉시 공개(온비드)
- (보존·가치제고) 매각에 앞서 장기대부·개발 등 활용가능성 先 검토해 보유재산 개발 활성화(예: 복합개발 통해 공공주택 공급) 등 적극적 가치 창출

【 국채관리 강화 】

- (효율적 국채관리) 국고·공사·보증채 발행시기·물량·만기를 조정하고, 단기국채 발행 확대 등 통해 단기투자 수요 충족 및 이자 절감
 - (국채 수요저변 확대) 제도·인프라 개선* 등 '26.4월부터 8개월간 WGBI 편입을 이행하고, 신규 외국인 투자자 적극 발굴
- * 한은금융망 및 예탁원 채권결제시스템 운영시간 연장, 국제예탁결제기구 내 국내금융기관 참여 허용 등

3 재정 등 구조혁신

◇ (재정) 재정 운용방식·지출구조 혁신 등 통해 성과 중심 재정운용

- (재정운용방식 혁신) AX·GX 등 핵심 아젠다에 대한 관계부처 연계·협업을 강화해 재정투자 생산성 제고
 - 포괄보조사업 지속 확대, 초광역권 사업 등 지방정부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재정운용 전과정에 국민참여·정보공개 확대*
- * (참여확대) 재정 전분야로 국민참여 확대(신규예산 발굴 중심 → 지출효율화·제도개선 제안까지 확대)
(정보공개 확대) 부처별 사업설명자료, 지출구조조정 내역, 예비비 사용계획서 등 예산자료 공개 확대

- **(지출효율화)** 유사중복 사업 정비, 의무·경직성 지출 효율화 등 근본적 사업·제도개편 중심 효율화 방안 마련('26)
 - 기존사업의 전면 폐지·통합·개편 등 강력한 사업 구조조정 추진
- **(사회보험 재정안정)** 주요 사회보험 재정위험 선제적 관리
 - * (건강보험) 과다의료이용자 본인부담 차등기준 단계적 확대(年 365회 초과→^{'27}300→^{'29}200)
 - (요양보험) 통합판정체계 도입 등을 통해 필요도에 맞는 의료·시설·재가 서비스를 제공
 - (고용보험) 실업급여가 구직자의 노동시장 재진입에 기여하도록 사회적 대화 바탕 제도개선 추진

◇ (세제) 체납관리 강화, 비과세·감면 정비 등 세입기반 확충

- **(국세) 체납관리단 구성**해 모든 체납자 실태확인 및 맞춤형 관리*, 압류재산 점검, 허위 근저당 조사로 공매 속행 등 적극적 체납관리
 - * (생계형)복지서비스 연계지원 및 납부의무 소멸 (고의·상습 체납자) 엄정 징수
- **(국세외수입)** 국세외수입 체납액을 국세청이 통합관리할 수 있도록 가칭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출범 추진(「국가채권관리법」 개정, '26.上)
- **(비과세·감면)** 관행적 일몰연장 탈피, 조세지출 전수 분석·정비

◇ (조달) 혁신조달 확대, 저가입찰방지 및 선급금 제도개선 등 조달행정 혁신

- **(혁신조달 강화)** '30년까지 혁신제품 공공구매 목표를 대폭 상향(年 1→3조원 수준)하고, 혁신제품 지정도 5천개('25.12월, 2,774개)까지 단계적 확대
- **(저가입찰 방지)** 적격심사제는 공사/물품·기술용역의 낙찰하한율 상향*하고, 2단계 경쟁입찰제는 납품 지체이력 신설·확대 등 기술평가 강화
 - * [공사] 85.495%~87.745%→+2%p('26.1.30~) [물품·기술용역] 79.995%~87.995%→+2%p('26.3월 최종 확정)
- **(선급금 개선)** 선급금 한도 환원^{100→70%}하고, 사전 단계적 선금지급*, 사후 선금지급조건 위배를 계약해지 사유로 추가 등 선금운용 관리·통제 강화
 - * (현행)최초지급시 선금한도(계약금액 70%)까지 지급 가능 → (개선 예시)의무지급률 수준(30~50%) 지급

- (공정계약 관리체계 구축) 위법·부당 계약관행, 납기지연 등 주요 문제유형 선별해 정기점검 실시(전담조사·관리조직 확충) 및 제도개선*

* 국가계약분쟁조정委의 조정안에 발주기관 구속력 부여 등 계약상대자 권리구제 확대(국가계약법 개정, '26.上)

- (의무조달 폐지) 지방정부의 조달청 단가계약 물품 의무구매 단계적 폐지*

* (1단계) 경기·전북 전기·전자제품 시범실시('26) → (2단계) 성과분석 후 전국 지방정부 확대('27~)

◇ (공공) 공공기관 기능개혁, 모범사용자 역할 강화 등 생산성·공공성 제고

- (경영평가 혁신) 상장공기업을 별도 구분해 기관 특성 고려한 평가지표 마련하고, 혁신프로젝트를 선정(공기업별 2개)해 경영·기관장 평가에 반영

- (기능개혁) 철도공기업 통합을 연내 마무리('26.上 운영통합→'26.下 기관통합)하고, 유사·중복기관 조정, 구조개편 등 기능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

- 평가·인증기능 및 융자사업 효율화*, 운영상 문제 누적기관 경영 정상화 등 통폐합·신설을 포함해 공공기관 개혁 기본계획 마련('26.1분기)

* 기관별 유사한 평가·인증제도 조정 및 비금융공공기관이 수행중인 융자사업 개선 추진

- (모범사용자 역할 강화) 관계부처 TF^{노동부·재경부 등} 통해 적정임금 도입, 고용 불안정성 보완하는 수당신설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추진

- 경영평가에 처우개선 노력을 반영하고, 적정임금 기준 마련시 예산운용지침에 반영

- (안전관리 강화) 중대재해시 기관장 해임근거 신설 및 안전경영 원칙 법제화^{공운법 개정}, 안전관리등급제 강화* 등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성 제고

* (심사대상 확대) 73→104개 (안전 성과지표 배점 확대) 300→350점

- (지역연계 강화) 지방이전 공공기관(10개 혁신도시 및 개별도시로 이전한 102개 공공기관)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구체적 방안 마련('26.6월)

	2025년	2026년
▪ 경제성장률(%)	1.0	2.0
▪ 취업자증감(만명)	19	16
- 고용률(%), 15세 이상	62.9	63.0
▪ 소비자물가(%)	2.1	2.1
▪ 경상수지(억불)	1,180	1,350
- 통관수출(%)	3.8	4.2
- 통관수입(%)	△0.0	2.0

① (성장) 내수를 중심으로 '25년보다 성장세 확대 전망(1.0→2.0%)

- 내수는 심리개선, 정책효과 등에 따른 소비 증가세 확대, 선행지표 개선에 따른 건설부진 완화 등으로 회복세 확대 전망
- 순수출은 반도체 호조*에도 관세영향 본격화와 내수 회복에 따른 수입 증가 등으로 '25년 대비 성장기여 약화 전망

* D램 매출증가율 전망(%), '25.3→4Q) : <WSTS> ('25)34→50 ('26)23→45
 <Gartner> ('25)33→48 ('26)30→74

② (고용) 성장세 확대에도 생산연령인구 감소 등 인구구조 변화로 취업자 증가폭은 '25년(19만명)보다 소폭 축소된 16만명 전망

- 고용률(63.0%)은 경제활동 참여 확대 등으로 역대 최대 예상

③ (물가) 내수 개선 등 상방요인에도 국제유가 하락으로 '25년과 유사한 수준인 2.1% 상승 전망

- 다만, 기상여건, 지정학적 리스크 등 불확실성 상존

④ (경상수지) '25년(1,180억불)보다 흑자폭 확대(1,350억불)되며 역대 최대 전망

- 반도체 업황 호조에 따른 단가 상승, 국제유가 하락 등으로 교역조건이 '25년보다 개선되며 흑자 규모 확대 예상

1. 대외 여건

□ AI 투자 호조 등에도 美 관세영향 본격화로 둔화 흐름 전망

- (성장) '25년 세계경제는 조기선적 등으로 양호한 흐름을 보였으나, 향후 美 관세영향이 본격화되며 성장·교역 증가세 둔화 전망

* '25→'26년 세계경제 전망(%), IMF<'25.10월>: (성장)3.2→3.1 (교역량)3.6→2.3

- 주요국 경기부양책, AI 투자 확대 등이 상방요인이나,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가능성 등 불확실성 상존

* 美 빅테크 자본지출(전년비, %, '25.8→12월 전망): ('24)55 ('25^e)55→60 ('26^e)19→37

세계경제 성장을 전망(%), IMF<'25.10월>

	전세계	선진국	미국	유로존	일본	신흥국	중국	인도
'25년 ^e	3.2	1.6	2.0	1.2	1.1	4.2	4.8	6.6
'26년 ^e	3.1	1.6	2.1	1.1	0.6	4.0	4.2	6.2

- (물가) 주요 산유국 공급확대에 따른 국제유가 하락, 수요압력 약화 등으로 물가상승률 둔화세 지속 전망

* 국제유가 전망(\$/b, 두바이유, 자체 추정): ('24)80 → ('25)69 → ('26^e)62 <△10%>

- 다만, 지정학적 불확실성, 이상기후, 글로벌 공급망 불안 등에 따른 국제원자재 가격 변동성 등은 리스크 요인

주요국 물가상승률 전망(%), IMF<'25.10월>

	전세계	선진국	미국	유로존	일본	신흥국	중국	인도
'25년 ^e	4.2	2.5	2.7	2.1	3.3	5.3	0.0	2.8
'26년 ^e	3.7	2.2	2.4	1.9	2.1	4.7	0.7	4.0

- (금융시장) 주요국 통화정책 기대변화, 연준 의장 교체('26.5월)와 美 중간선거(11월) 등 주요 이벤트 계기 변동성 확대 가능성

2. 국내경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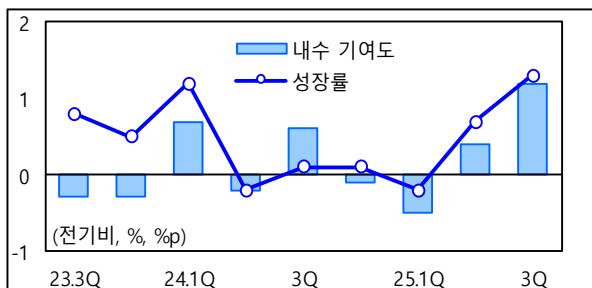
1 경제성장

① [GDP] '25년 1.0%, '26년 2.0% 성장 전망

- ('25년) 계엄여파로 1분기 역성장했으나, 새정부 출범에 따른 심리 개선, 추경 등 정책효과, 반도체 수출 호조 등으로 1.0% 성장 전망
 - * 경제성장률(전기비, %): ('24.1Q)1.2 (2Q)△0.2 (3Q)0.1 (4Q)0.1 ('25.1Q)△0.2 (2Q)0.7 (3Q)1.3
- ('26년) 내수 중심으로 '25년보다 성장세 확대 전망
 - 내수는 심리개선, 정책효과 등에 따른 소비 증가세 확대, 선행지표 개선에 따른 건설부진 완화 등으로 회복세 확대 전망
 - 순수출은 반도체 호조*에도 관세영향 본격화와 내수 회복에 따른 수입 증가 등으로 '25년 대비 성장기여 약화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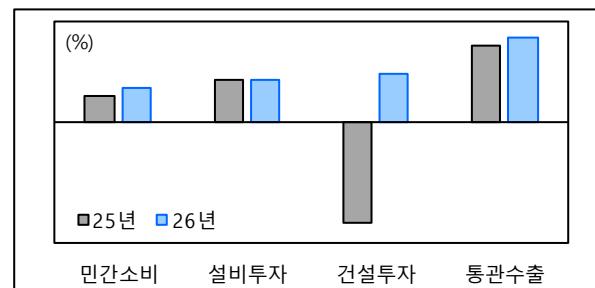
* D램 매출증가율 전망(%), '25.3→4Q) : <WSTS> ('25)34→50 ('26)23→45
<Gartner> ('25)33→48 ('26)30→74

경제성장률 및 내수 기여도 추이



* 출처: 한국은행

'25→'26년 컴포넌트별 전망



* 출처: 자체추정

【 경상GDP : '25년 3.8%, '26년 4.9% 성장 전망】

※ 경상성장률(%): ('24)6.2<실질성장률_{2.0} + 디플레이터 상승률_{4.1}> ('25^e)3.8<1.0 + 2.8> ('26^e)4.9<2.0 +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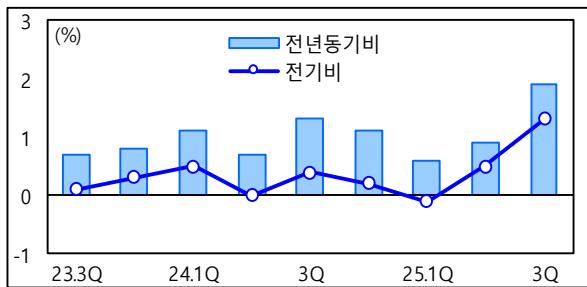
- ('25년) 국제유가 하락 등 교역조건 개선에 따른 디플레이터 상승세가 지속되며 3.8% 성장 전망
- ('26년) 성장세 확대와 함께 반도체가격 상승 및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교역조건 개선세 확대 등으로 '25년보다 높은 4.9% 성장 전망

② [민간소비] '25년 1.3%, '26년 1.7% 증가 전망

- ('25년) 1분기 역성장 이후 소비심리 개선,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정책 효과, 중시 활성화 등에 힘입어 회복세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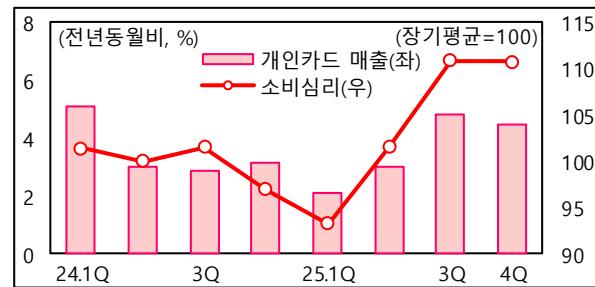
* 민간소비(전기비, %): ('24.1Q)0.5 (2Q)0.0 (3Q)0.4 (4Q)0.2 ('25.1Q)△0.1 (2Q)0.5 (3Q)1.3

GDP 민간소비



* 출처: 한국은행

카드매출액 및 소비자심리



* 출처: 여신협회, 한국은행

- ('26년) 실질구매력 개선, 정책 효과 등으로 증가세 지속 전망

- 경기 회복에 따른 기업실적 및 고용 개선, 교역조건 개선 등으로 가계 실질구매력 증가 전망
- 적극적 재정정책(전년비 +8.1%), 누적된 기준금리 인하(△100bp) 영향, 가계소득 지원정책 확대* 등도 긍정적으로 작용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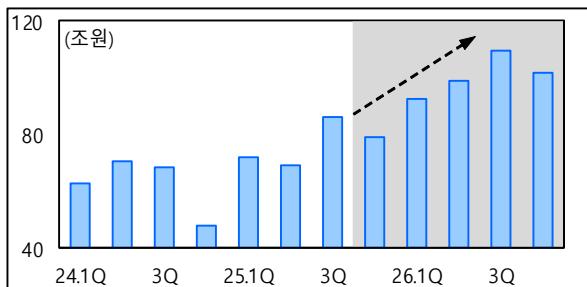
*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0.2조원), 노인일자리(+5.4만개), 청년 구직촉진수당 상향(50→60만원) 등

- 다만,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와 기대여명 증가 등으로 평균 소비성향이 구조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점은 제약요인

* 연령대별 인구수 변화(만명, '25→'26): (20대이하)△46.9 (30~40대)△3.1 (50~60대)6.2 (70대이상)3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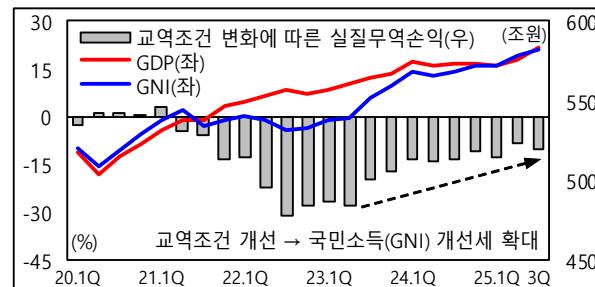
↳ 전체 평균소비성향(%), 한은): ('10~'12)76.5 → ('22~'24)70.0

영업이익(코스피 상장기업 대상)



* 출처: FnGui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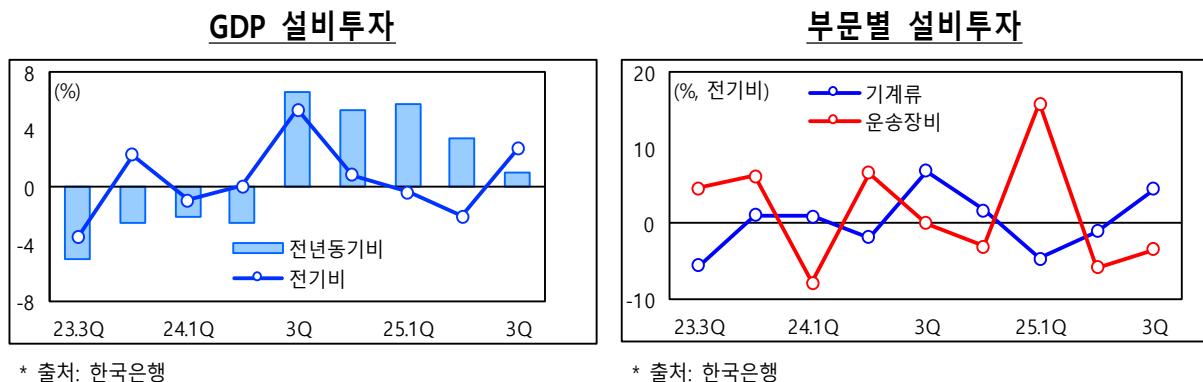
교역조건 변화와 국민총소득(GN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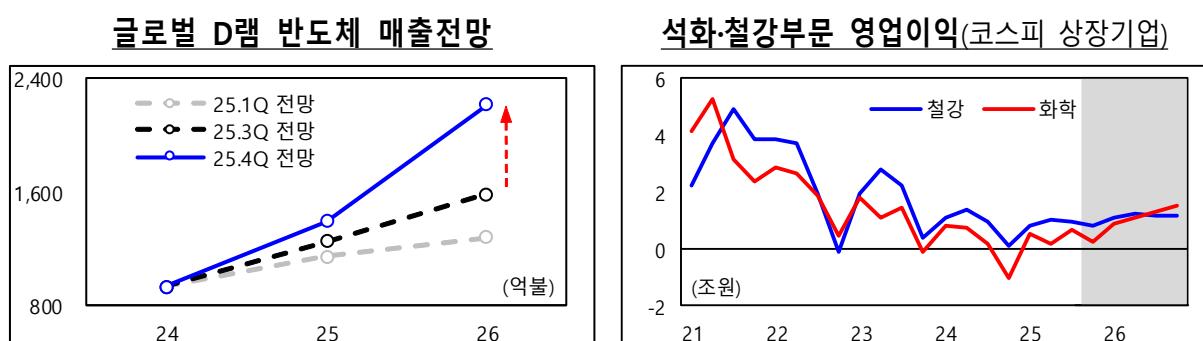
* 출처: 한국은행

③ [설비투자] '25년 2.1%, '26년 2.1% 증가 전망

- ('25년) 상반기는 '24년 하반기 큰 폭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감소했으나, 하반기는 반도체 업황 호조에 힘입어 반등
 - * 설비투자(전기비, %): ('24.1Q)△1.0 (2Q)0.0 (3Q)5.4 (4Q)0.8 ('25.1Q)△0.4 (2Q)△2.1 (3Q)2.6



- ('26년) 반도체 등 IT 부문 중심으로 증가 흐름 지속 전망
 - 반도체 업황 호조로 첨단공정 전환 수요가 지속되는 가운데, 주요 기업의 대규모 투자계획 등이 설비투자 견인 예상
 - * 4대 그룹(삼성·SK·LG·현대차) 향후 5년간 800조원 규모 투자계획 발표('25.11월)
 - AI 등 첨단산업 투자 확대 정책 기조도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
 - * '26년 국민성장펀드 30조원 투입, GPU 구매 등 AI 예산 약 3배 확대(9.9조원)
 - 다만, 석유화학·철강 등 비IT 부문 업황 부진이 지속될 경우 설비투자 증가세 제약 가능성



* 출처: WSTS, Gartn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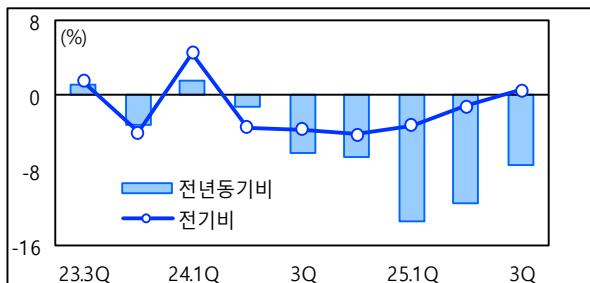
* 출처: FnGuide

④ [건설투자] '25년 △9.5% 감소, '26년 2.4% 증가 전망

- ('25년) 건설투자는 3분기 증가 전환(전기비 +0.6%)에도 연간 전체로는 상반기까지 지속된 부진 영향으로 큰 폭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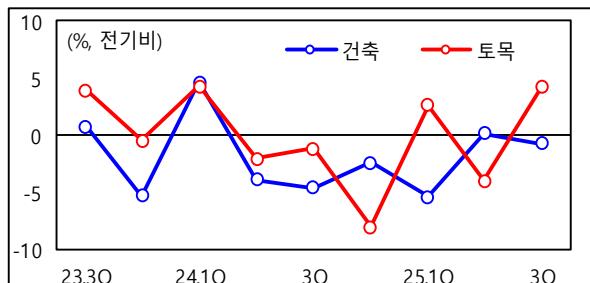
* 건설투자(전기비, %): ('24.1Q)4.5 (2Q)△3.3 (3Q)△3.6 (4Q)△4.1 ('25.1Q)△3.1 (2Q)△1.2 (3Q)0.6

GDP 건설투자



* 출처: 한국은행

형태별 건설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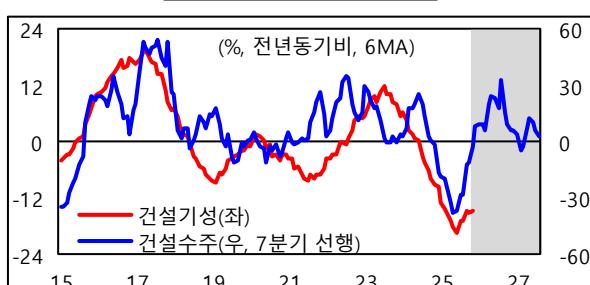
* 출처: 한국은행

- ('26년) 수주·착공 등 선행지표 개선*, 반도체 공장 건설 및 SOC 예산 확대 등으로 건설투자 증가하며 부진 완화 전망

* 건설수주(전년동기비, %): ('24.上)5.6 ('24.下)15.7 ('25.上)△2.7 (3Q)2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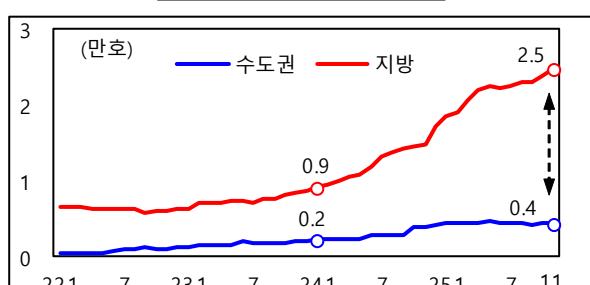
- 건축의 경우 반도체 호조로 공장 건설 중심 개선 예상
- 토목은 SOC 예산 확대('25년^{2차추경} 26.0 → '26년 27.7조원), GTX 등 대형사업 공사 진척 등으로 개선 예상
- 다만, 미분양 누적 등 지방 주택시장 침체는 회복세 제약요인

건설수주와 건설기성



* 출처: 국가데이터처

지역별 준공후 미분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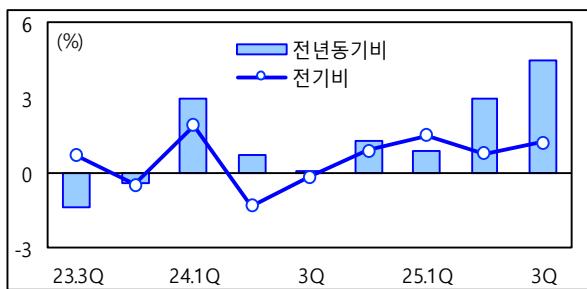
* 출처: 국토교통부

⑤ [지식재산생산물투자] '25년 3.0%, '26년 3.3% 증가 전망

- ('25년) 지재투자는 R&D 예산 증가 등에 힘입어 3분기까지 높은 증가세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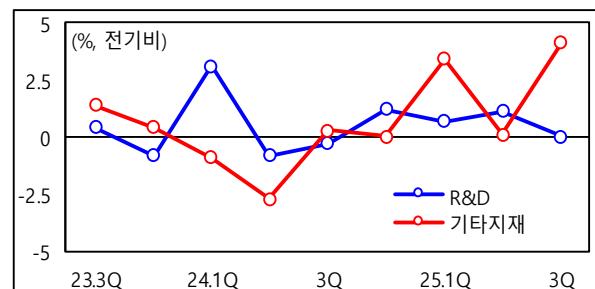
* 지재투자(전기비, %): ('24.1Q)1.9 (2Q)△1.3 (3Q)△0.2 (4Q)0.9 ('25.1Q)1.5 (2Q)0.8 (3Q)1.2

GDP 지식재산생산물투자



* 출처: 한국은행

형태별 지식재산생산물투자



* 출처: 한국은행

- ('26년) AI 등 첨단산업 기술경쟁 격화, R&D 예산 큰 폭 확대 등 영향으로 양호한 흐름 지속 전망

* R&D예산(조원)<전년동기비, %>: ('23)31.1 ('24)26.5<△14.6> ('25)29.6<+11.5> ('26)35.5<+19.9>

⑥ [수출입(통관)] 수출 '25년 3.8% 증가, '26년 4.2% 증가 수입 '25년 △0.0% 감소, '26년 2.0%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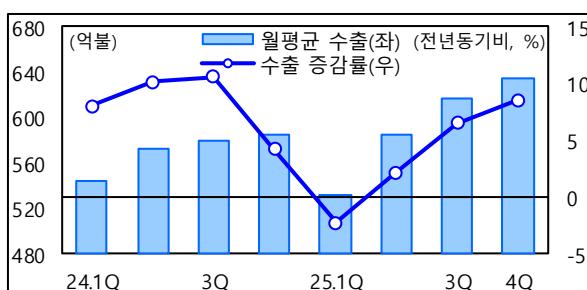
[수출 : '25년 3.8% / '26년 4.2%]

- ('25년) 1분기는 조업일 영향(△3.0일) 등으로 감소했으나, 2분기 이후 美 관세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호조 등에 힘입어 3분기 연속 증가

* 전체수출(전년동기비, %): ('24)8.1 / ('25.1Q)△2.3 (2Q)2.1 (3Q)6.5 (4Q)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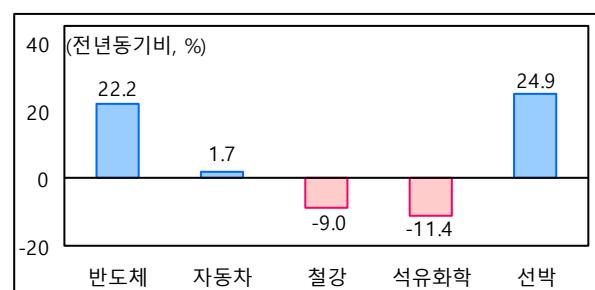
반도체 수출(전년동기비, %): ('24)43.9 / ('25.1Q) 6.0 (2Q)16.3 (3Q)26.5 (4Q)36.0

통관수출



* 출처: 관세청, 무역협회

주요 품목별 수출 증가율('25년 연간)



* 출처: 관세청, 무역협회

- ('26년) 美 관세영향이 본격화되며 글로벌 교역은 둔화되겠으나, AI 투자 확대에 따른 반도체 호조로 수출 증가세 지속 전망

* '25→'26년 세계경제 전망(%), IMF<'25.10월>: (성장)3.2→3.1 (교역량)3.6→2.3

* 美 빅테크 자본지출(전년비, %, '25.8→12월 전망): ('24)55 ('25^e)55→60 ('26^e)19→37

【 수입 : '25년 △0.0% / '26년 2.0%】

- ('25년) 원유·가스 등 에너지 수입 중심으로 감소세

* 수입(전년동기비, %): ('24)△1.7 / ('25.1Q)△1.3 (2Q)△1.8 (3Q)1.5 (4Q)1.4

↳ '25년 부문별 수입(전년비, %): (에너지)△13.4 (비에너지)3.7

- ('26년) 국제유가 하락^{*}으로 에너지 수입 둔화가 지속되겠으나, 소비 개선, 반도체 투자 확대^{**} 등으로 전체 수입은 증가 전망

* 국제유가 전망(\$/b, 두바이유, 자체 추정): ('24)80 → ('25)69 → ('26^e)62 <△10%>

** 수입유발계수(산업연관표, '20년 기준): (소비) 0.195 (투자) 0.268 (수출) 0.321

【 경상수지 : '25년 1,180억불 / '26년 1,350억불】

- ('25년) 상품수지 호조가 이어지며 큰 폭의 흑자기조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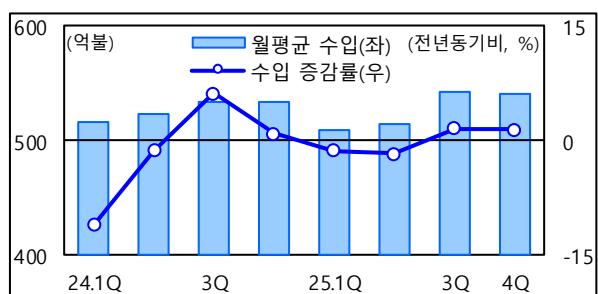
* 경상수지(억불): ('24)990 / ('25.1Q)193 (2Q)301 (3Q)334 (10)68 [1-10월]896

상품수지(억불): ('24)1,001 / ('25.1Q)192 (2Q)328 (3Q)339 (10)78 [1-10월]9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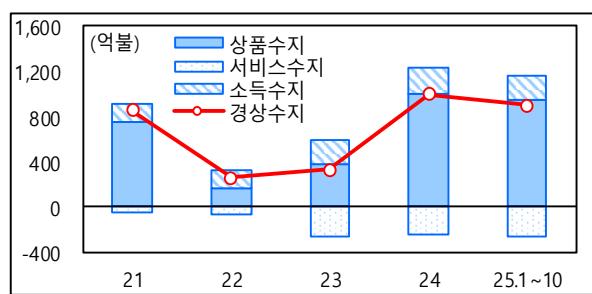
- ('26년) 반도체 단가 상승^{*}, 국제유가 하락 등으로 교역조건이 '25년보다 더 개선되며 역대 최대 흑자 규모 예상

* 반도체 수출물가(전년동기비, %): ('24)31.7 ('25.1Q)0.2 (2Q)△5.3 (3Q)△2.2 (10)19.5 (11)32.7

통관수입



경상수지



* 출처: 관세청, 무역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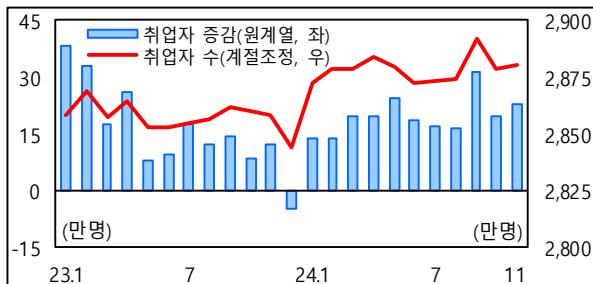
* 출처: 한국은행

□ 취업자수는 '25년 19만명, '26년 16만명 증가 전망

- ('25년) 취업자수는 건설·제조업 감소에도 보건복지·금융보험 등 서비스업 중심으로 크게 늘며 '24년보다 증가세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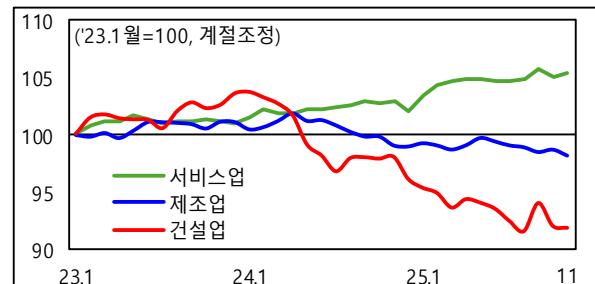
* 취업자 증감(전년비, 만명): ('24)15.9 / ('25.1Q)15.5 (2Q)20.7 (3Q)21.6 (10~11월)20.9 [1~11월]19.6

전체 취업자수 및 증감



* 출처: 국가데이터처

산업별 취업자수



* 출처: 국가데이터처

- ('26년) 생산연령인구 감소,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로 취업자 증가폭은 '25년 대비 소폭 축소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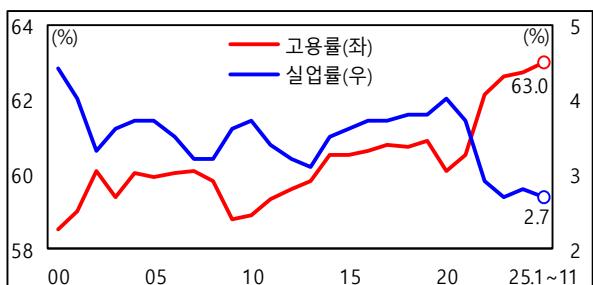
* 생산연령인구 증감(만명, 장래인구추계): ('23)△17.2 ('24)△24.4 ('25)△41.5 ('26)△42.4

- 건설·제조업 고용은 부진이 점차 완화되겠으나, '25년 큰 폭 증가했던 서비스업^{*}은 다소 조정 전망

* 서비스업 취업자 증감(전년비, 만명, 월평균): ('23)38.5 → ('24)23.9 → ('25.1~11)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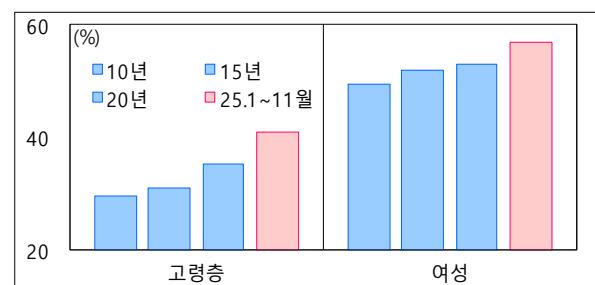
- 고용률('25년 62.9→'26년 63.0%)은 고령층·여성 경제활동 참여 확대, 내수 개선 등으로 역대 최고 수준 전망

고용률·실업률 추이(15세 이상)



* 출처: 국가데이터처

여성·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 출처: 국가데이터처

□ 소비자물가는 '25년 2.1%, '26년 2.1% 상승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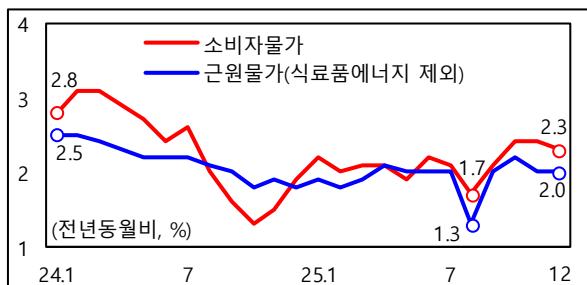
- ('25년) 가공식품 등 높은 먹거리 가격 상승률, 환율 상승에 따른 수입물가 상방압력 등으로 연간 2.1% 상승

* 소비자물가(전년동기비, %): ('24)2.3 / ('25.1Q)2.1 (2Q)2.1 (3Q)2.0 (10)2.4 (11)2.4 (12)2.3

- 추세적 물가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는 2% 내외 흐름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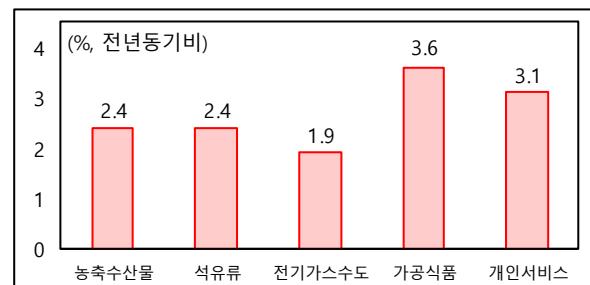
* 근원물가(전년동기비, %) : ('24)2.2 / ('25.1Q)1.9 (2Q)2.0 (3Q)1.7 (10)2.2 (11)2.0 (12)2.0

소비자물가·근원물가



* 출처: 국가데이터처

'25년 품목별 상승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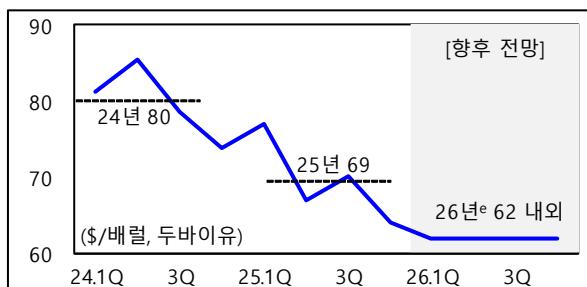
* 출처: 국가데이터처

- ('26년) 내수 개선 등 상방요인에도 주요 산유국 증산 등에 따른 국제유가 하락으로 '25년과 유사한 2.1% 상승 전망

* 국제유가 전망(\$/b, 두바이유, 자체 추정): ('24)80 → ('25)69 → ('26°)62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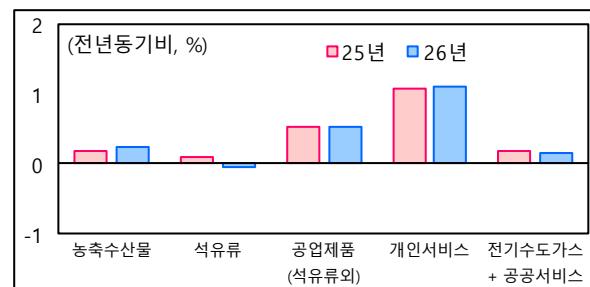
- 다만, 기상여건,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따른 원자재·농산물 가격 변동성 등 불확실성 상존

국제유가 예상경로



* 출처: 페트로넷, 자체추정

품목별 기여도 전망



* 출처: 자체추정

2025~2026년 경제전망 요약

(전년동기비, %)

	'24년 실적	'25년				'26년 전망
		1/4	2/4	3/4	연간 ^e	
전망 전제						
세계경제*	3.3	-	-	-	3.2	3.1
Dubai 유가(\$/bbl)	80	77	67	70	69	62
실질 GDP	2.0	0.0	0.6	1.8	1.0	2.0
민간소비	1.1	0.6	0.9	1.9	1.3	1.7
설비투자	1.7	5.8	3.4	1.0	2.1	2.1
건설투자	△3.3	△13.3	△11.4	△7.5	△9.5	2.4
지식재산생산물투자	1.2	0.9	3.0	4.5	3.0	3.3
경상 GDP	6.2	2.4	3.4	4.6	3.8	4.9
취업자 증감(만명)	16	16	21	22	19	16
고용률(15세 이상, %)	62.7	61.8	63.5	63.5	62.9	63.0
소비자물가	2.3	2.1	2.1	2.0	2.1	2.1
경상수지(억달러)	990	193	301	334	1,180	1,350
상품수지(억달러)	1,001	192	328	339	1,210	1,360
수출(통관)	8.1	△2.3	2.1	6.5	3.8	4.2
수입(통관)	△1.7	△1.3	△1.8	1.5	△0.0	2.0
서비스 · 본원 · 이전 소득수지(억달러)	△11	1	△27	△5	△30	△10

* IMF World Economic Outlook ('25.10월)

□ 우리경제 기초체력인 **잠재성장률은 최근 1%대 후반까지 하락**

- 역대 정부마다 대체로 $\Delta 1\%$ p씩 지속 하락해 온 잠재성장률은 現 추세 지속 시 '30년대 1% 내외, '40년대 0%대까지 하락 전망

* 잠재성장률(OECD, %, 연평균) : (金^{'98~'02})5.4 (盧^{'03~'07})4.7 (李^{'08~'12})3.8 (朴^{'13~'16})3.2 (文^{'17~'21})2.7 (尹^{'22~'25})2.3

- 잠재성장률 급락에는 인구감소, 투자위축, 생산성 정체 모두 작용

- (노동) 생산연령인구 감소로 노동 성장기여도가 지속 축소되는 가운데, '30년 전후 (-) 전환되며 인구 오너스(Onus) 시대 본격화 전망

* 생산연령인구 증감(만명, 연평균) : ('10년대)17 ('20년대) $\Delta 31$ <20년부터 감소 지속> ('30년대) $\Delta 50$ ('40년대) $\Delta 48$

- (자본) 경직적 규제, 시중자금 부동산 편중 등으로 투자가 위축^{*}된 가운데, 자국 우선주의, 밸류체인 위기 등 세계경제질서 변화로 투자 유출 우려

* 경제성숙·자본축적에 따른 투자 증가율 둔화는 일반적인 현상이나, 주요국 대비 하락속도가 빠른 편

- (생산성) 미국 등 주요국과의 기술격차가 여전한 가운데, 중국의 기술 추격, AX·GX 지연, 中企·서비스업 低생산성^{*} 등으로 생산성 정체

* 생산성 격차(%,'23년) : (중소기업/대기업)32.8 (서비스업/제조업)49.4

잠재성장률 추이

연령대	잠재성장률 (%)
01-10	4.6
11-20	3.0
21-26	2.1
25-29	1.8
30-39	1.2
40-49	0.7

총고정자본형성 증가율

시기	증가율 (%)
80년대	10
90년대	8
00년대	6
10년대	4
20~24년	2

주요 5개국 기술수준

국가	2014 (%)	2018 (%)	2022 (%)	2024 (%)
美	100	100	100	100
EU	100	98.5	97.0	95.5
日	100	98.5	97.0	95.5
中	78.4	76.9	82.6	86.8
韓	69.7	76.0	81.5	82.8

* 출처: 한국은행

* 출처: 한국은행, OECD

* 출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 미국의 경우 IT 혁명, AI 등 기술 전환기마다 과감한 투자와 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잠재성장률 반등에 성공

* 美 잠재성장률(%), 美 CBO : ['90년대] ('91)2.7→('99)4.4 / ['10~'20년대] ('10)1.5→('24)2.3

- 54 -

별첨 3

양극화 현황 및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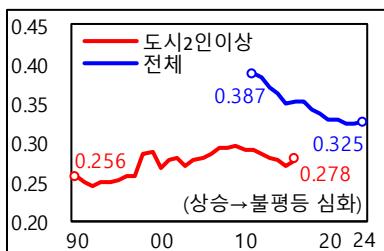
□ [현황] 소득 불평등은 주요국 대비 여전히 높고, 자산격차 최고 수준

- (소득분배) '90년대 후반 급격히 악화, '10년대 이후 복지지출 확대* 등으로 다소 개선됐으나, OECD 주요국 대비 불평등도는 여전히 높은 수준

*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중(%), GDP 대비): ('00)4.2 ('10)7.4 ('20)14.9 ('24^p)1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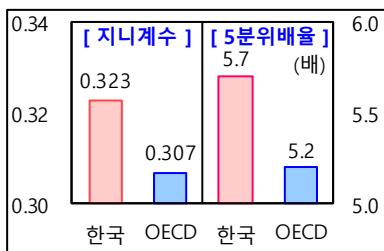
- (자산격차) '10년대 중반부터 확대, '25년(3월)은 통계작성 이후 최고 수준

가처분소득 기준 지니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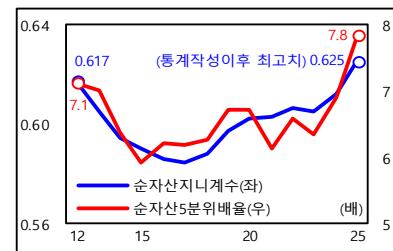
* 출처 : 국가데이터처

소득 분배지표 OECD 비교



* 출처 : OECD(24개국) / '23년 기준

순자산 지니계수 및 5분위배율



* 출처 : 국가데이터처, 매년 3월 기준

□ [원인] 산업재편 등 경제구조 요인과 불공정 제도·관행 등 복합작용

- '90년대 이후 개방화·IT화로 비교우위 있는 대기업·IT에 성장 편중*, 非IT는 중국의 기술추격, 中企**는 투자·인력 부족으로 성장 정체

* IT 부문 성장기여율(%): ('90년대)1.0 ('00~'10년대)11.6 ('20~'24년)3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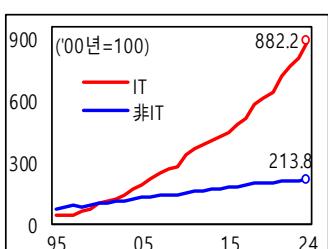
** 대기업 대비 中企 생산성% 제조업 OECD, '20년: (韓)36.8 (佛)62.7 (獨)56.1 (日)^{19년}57.2 (OECD^{28개국} 평균)55.8

- 大-中企 불공정거래*,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은 소득양극화 증폭**

* 대기업의 기술탈취 위협으로 혁신유인 악화 大-中企 간 협상력 차이로 납품대금 조정 시 불이익 사례 빈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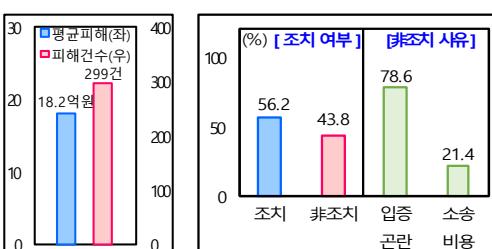
** 세전-세후 지니계수 개선율(%), '23년: (한국)17.6 (프랑스)42.2 (영국)29.7 (미국)22.1 (OECD 24개국)35.2

IT vs 非IT 부문 국내총생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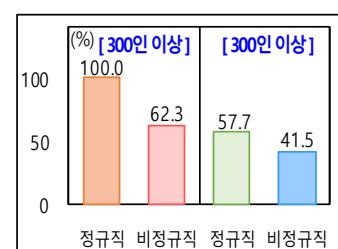
* 출처 : 한국은행

중소기업 기술탈취 피해현황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중기중앙회('23)

사업체규모·고용형태별 시간당임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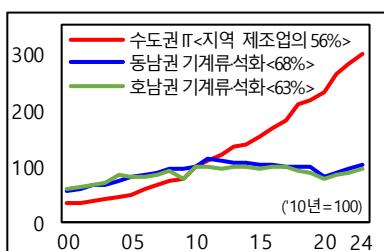


* 출처 : 고용노동부('24.6월)

③ 생산·소득 양극화 지속되며 지역간 불균형 심화, 자산 양극화로 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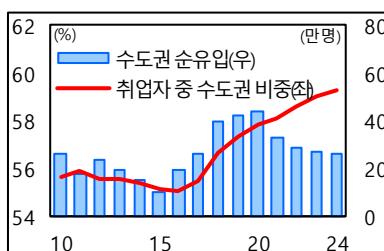
- 非IT 중심 지역산단 쇠퇴 등으로 교육·일자리 기회 찾아 청년 수도권 유입, 기업은 우수한 청년채용 위해 수도권 이동 → 수도권 집중 심화 악순환
 - * 수도권-비수도권 투자 증가율 격차 '00~'14년 $\Delta 0.6 \rightarrow '15~'24년 2.1\%$ / 수도권 GRDP '15년~ 인구 '19년~ 비중 50% 상회
 - * 30대 기업 본사 수도권 소재 비중 '23년 95.5% / 전체 대학 입학정원 중 수도권 비중 '10년 36.0% $\rightarrow '25년 40.0\%$
- 인구·기업이 밀집된 수도권 부동산에 자금이 유입되며 아파트 가격 상승 → 부동산 중심 자산 양극화 촉발
 - * 부동산 신용 규모·비중(조원 % 한은): ('12)799<45.6> ('15)1,034<48.2> ('20)1,565<50.1> ('24)1,933<49.7>

지역별 주요업종 GRDP(실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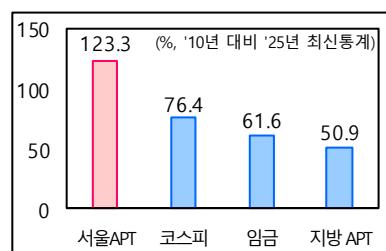
* 출처 : 국가데이터처

25~34세 취업자 중 수도권 비중 및 순유입



* 출처 : 한국은행

부문별 가격 상승률



* 출처 : 한국은행, 고용노동부, 한국거래소

□ [평가] 'K자형 성장' 지속되며 형평성뿐 아니라 성장에도 부정적 영향

○ (공급) 경제주체들의 교육·근로의욕 저하로 인적자본 형성 저해

※ IMF는 불평등 확대가 인적자원의 非최적(suboptimal) 활용 등을 야기해 성장에 중요한 함의가 있다고 언급('15) <소득분위별 소득비중 1%p 증가 시 5년간 GDP 영향(%): (1분위)0.38 (3분위)0.27 (5분위) $\Delta 0.08$ >

- 지역 간 격차로 수도권 경쟁·양육 부담 확대*, 中企·비정규직 결혼·출산 기피** → 출생률 하락시켜 잠재성장률 악영향

* 시도별 인구밀도와 합계출산율은 (-)의 관계(한은, '23) / 합계출산율(명, '24): (전체)0.75 (서울)0.58<최저>

** 부부가 안정된 직장에 근무 시 출산 증가(보사연 '21), 아내가 30인미만 기업 근무 시 출산 감소 영향(보사연 '20)

○ (수요) 고소득층 소비성향*이 저소득층보다 낮고, 부동산發 가계 부채 증가**로 민간소비 등 내수기반 약화

* '25.3분기 평균소비성향(%): (전체)67.2 / (1분위)123.1 (2분위)75.0 (3분위)71.2 (4분위)69.9 (5분위)54.9

** 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 80% 상회 시 채무부담에 따른 소비 제약으로 성장에 부정적 영향 가능성(한은 '23.4월)

별첨 4

주요 정책과제 Action Plan

1. '26년 1분기 주요 추진과제

정책 과제	부처·기관
BTL 특별인프라펀드(1,000억원) 신설 등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마련 외투기업의 국내 R&D 투자 진입애로 해소방안 마련 시중은행 선물환수수료 인하 지원 확대 및 중소·중견기업 환변동 보험 확대 부처별 물가안정책임관 지정 및 업무평가에 소관품목 물가지표 반영 <small>인구감소(관심)지역 양도·종부세 부과시 주택수 미포함, 양도세 종과제와(종합부동산세법·소득세법 시행령 개정)</small> CR리츠 세제지원 연장(법인세법·종부세법 시행령 개정) 준공후미분양 주택 취득 지원 기액기준 상향(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계약학과, 거점대학 추가지정 등 첨단 방산인력 양성 강화 가칭 바이오산업 정책 로드맵 마련 석유화학·철강 분야 신성장원천기술 추가·확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제조AI 2030 전략 마련 중기 AI 스마트공장 및 대·중기 상생형 AI 공장 확대 맞춤형 AI 교육(대학생 ^{비전공생} ,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민관합동 K-GX 추진단 출범 초혁신경제 15대 프로젝트 등 첨단전략산업 기업 대상 신·기보 우대 보증 국가전략기술(차세대전력반도체, 한국형 LNG화물창 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그래핀·특수탄소강 기술) 추가·확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차세대전력반도체 기술로드맵 및 그래핀 기술 상용화 로드맵 수립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 마련(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 추진) 함정 MRO 클러스터 조성 가칭 전략경제협력추진단 신설(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 규정 개정)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제도개선(자유무역협정농어업법 개정) 국민참여형 펀드 장기투자시 소득공제 및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조세특례제한법 개정) 기업 조직개편시 이사의 행위규범 가이드라인 발표 MSCI 로드맵 과제 추진 <small>* 글로벌 수탁은행의 결제계좌 개설·관리 허용 등 글로벌 결제구조 도입 * CLS(외환동시결제) 기반 증권결제 지원을 위한 인프라·제도 정비 * LEI(법인식별번호) 발급확인서 도입 및 실명확인증표 인정 * 장외거래 세부 가이드라인 발간 및 조건부 주식양도 계약 장외거래 사후보고 허용 * 실시간 무차입공매드 적발시스템(NSDS) 참여자 중복 감리자로 제출 및 보고의무 면제 등 * 선진 배당절차 도입시 기업가치 제고 우수기업·공시우수법인 선정 가점 부여</small> 4대 과기원, 거점국립대에 AI 단과대학 신설 및 지방대학과 교육과정 공유·확산 거점국립대 지역전략산업 유관 계약학과 확대	기획처 산업부 금융위·산업부 농식품부·해수부· 행안부·교육부 등 재경부 재경부·국토부 재경부 방사청 재경부 재경부 산업부·과기부· 중기부 중기부·산업부 교육부·과기부· 중기부 등 재경부·기후부 등 금융위·중기부 재경부 산업부 금융위 방사청 재경부 농식품부·해수부 등 재경부 법무부 재경부·금융위 등 과기부·교육부 교육부

정책 과제	부처 · 기관
지역고용촉진지원금 고용위기선제대응 지역으로 확대	노동부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전략 마련 * 대·중소 對美 투자프로젝트 동반진출 지원한도 2배 확대 * 상생금융프로그램 확대·확산(현대·기아차 사례) * 배달플랫폼 입점업체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 검토	재경부·증기부 금융위·산업부· 공정위 등
코스닥벤처펀드의 세제혜택 한도 확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재경부
연기금 기금운용평가시 코스닥지수 일정 비율 반영	기획처
BDC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 적용(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재경부
생활형 R&D(레시피 개발, AI 로봇 요리, AI 홍보, AI 상권분석 등) 추진	증기부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활성화(노사정TF 운영)	노동부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 마련	금융위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 구축	금융위
안전설비투자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범위 확대	재경부
행복한 일터 인증제 신설방안 마련 및 세제 인센티브 신설 검토(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노동부·재경부
일반지주회사 증손회사 의무지분율 완화, 금융리스 필요최소한 허용(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	산업부·공정위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특례 신설 및 예방 투자기업에 대한 과징금 감경 등 인센티브 부여(개인정보보호법 개정)	개보위
의료분야 데이터스페이스 구축 착수	과기부·복지부
AI 학습용데이터 구매비용을 R&D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재경부
국유재산 수의매각 요건 삭제·정비(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	재경부
공공계약 선금 운용에 대한 관리·통제 강화	재경부
공공기관 개혁 기본계획 마련, 중대재해시 공공기관장 해임근거 신설(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재경부
공공기관 적정임금 기준 예산운용지침 반영	재경부·기획처

2. '26년 2분기 주요 추진과제

정책 과제	부처 · 기관
서비스 수출 혁신전략 수립	재경부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연구용역 추진	재경부·농식품부 등
공동농업경영체 지정요건 완화(농어업경영체법 시행령 개정)	농식품부
전세사기 피해자 종합 지원방안 마련(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등)	국토부
전세 신탁 도입 추진(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	국토부
화학산업 생태계 종합지원 대책 마련 및 철근에 대한 감축 로드맵 제시	산업부
휴머노이드 개발 15대 프로젝트 추진	산업부·과기부
K-GX 전략 수립	재경부·기후부 등
블록체인 기반 국고금 집행 실증 사례 창출(전기차 충전 인프라)	기후부
대한민국 경제대도약 액션플랜 마련(정부·경인사연·국책연구기관·민간전문가 등 협업)	재경부

정책 과제	부처 · 기관
가칭 전략수출금융기금 신설(전략수출금융특별법 제정)	재경부
APEC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출범	증기부
CPTPP 가입 가능성 모색 및 멕시코 FTA 협상재개 여건 조성	산업부·외교부
민간재원을 활용한 개발금융 추진방안 마련	재경부
원화 국제화 로드맵 마련	재경부
MSCI 로드맵 과제 추진 * IRC(외국인투자등록증) → LEI(법인식별기호) 식별체계 전환 등 계좌개설 편의 제고 * 국내 외환시장 24시간 연장 운영 및 해외지점·eFX 인프라 연계	재경부·금융위 등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행안부
기술나눔 인센티브 방안 마련	산업부
하도급법 위반 행위 시 정액 과징금 상향(하도급법 개정)	공정위
중소기업 P-CBO 연대보증 면제	금융위·증기부
소상공인 생산성 제고 방안 마련	재경부·증기부
은행권 저금리 철거지원금 대출 신설	금융위
청년미래적금 출시	복지부
국민연금 소득활동 감액 축소(1,2구간 감액 폐지)	국토부
안전관리비 활용 매뉴얼 제정	문체부
인디게임 신시장 수출 전략 수립 및 현지화 지원	지재처
한류편승상품 실태 조사 및 현지 권리확보·단속	재경부
서비스산업 현장애로 해소방안 마련	재경부
한국형 국부펀드 설립 추진	재경부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출범(국가채권관리법 개정)	재경부
적격심사제 및 2단계 경쟁입찰 제도 보완	재경부
정기점검 실시, 제도개선 등 공정계약 관리체계 구축(국가계약법 개정 등)	재경부·조달청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 및 지방이전 공공기관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	재경부

3. '26년 하반기 주요 추진과제

정책 과제	부처 · 기관
모듈러주택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	국토부
주택환매 보증제 도입	국토부
상장리츠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재경부
부동산 감독기구 설립 추진(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국조실·국토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산업부
군 수요연계 R&D(구매조건 R&D 등) 지원	증기부
방위산업 상생협력 수준 평가 도입	방사청
석화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자산매각 시 법인세 과세이연 기간연장(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재경부

정책 과제	부처 · 기관
국가 AI 컴퓨팅센터 착공 추진	과기부
온라인 AI 교육 single window 구축(통합 플랫폼 조성 및 기존 플랫폼 연계)	과기부
초중고생 AI 기본교육 확대	과기부·교육부
저탄소제품 인증제도 개편방안 마련	기후부
글로벌 자발적 탄소시장(GVCM) 시범사업 발굴	재경부
R&D 연구장비 도입기간 단축(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재경부
국경 간 스테이블코인 거래 규율 방안 마련(외국환거래법 개정 등)	재경부·금융위 등
블록체인 활용 지급·결제를 위한 법령 정비(한국은행법, 국고금 관리법 개정 등)	재경부
업무추진비 등을 예금토론으로 지급·결제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	재경부
한-미 조선협력 센터 구축 등 MASGA 프로젝트 참여 지원	산업부
한-미 원전기업 공급망 협력 및 제3국 공동진출 등 지원	산업부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재경부
국민참여형 펀드 상품 출시	금융위
생산적 영역 자금대여 시 대출채권 대손충당금 손금인정 한도 상향(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재경부
생산적 금융 ISA 신설(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재경부
MSCI 로드맵 과제 추진 * 자본거래 신고 완화·폐지 검토 및 중복신고 일원화	재경부
RE100산단 최고 수준 세제지원(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재경부
AI중심대학을 거점으로 지역전략산업의 AX 전환 창업 지원	과기부
지역별 세제지원 차등 방안 마련	재경부
중기 협동조합에 협의요청권 부여(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	중기부 등
납품대금연동제 우수기업에 대한 수위탁 직권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 확대	중기부
공공하도급·민간건설하도급에 전자대금지급시스템 단계적 의무화(하도급법 개정)	공정위 등
대규모 유통업자의 대금 지급기한 단축(대규모유통업법 개정)	공정위
기술탈취 기업 대규모 과징금 도입(중소기업기술보호법 개정)	중기부
모태펀드 위험손실 부담방안 마련	중기부
청년 신산업 창업기업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 확대(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재경부
생활형 R&D 신규 아이템 경진대회 개최	중기부
기초연금 정책효과 점검 및 개선방안 마련	복지부
EITC 제도 개선방안 마련	재경부
복지제도의 1인가구 지원효과 점검 및 개선방안 검토	복지부
신성장·원천기술에 첨단 안전시설 추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재경부
중소기업 안전설비 투자시 가속상각 특례(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재경부
뷰티 서비스 수출 활성화 지원방안 마련	재경부
국내외 위조상품 유통 차단을 위한 정품 인증 체계 구축	지자체
문화 분야 AI 학습용데이터 개방 확대	문화부
중기 졸업 시 일정기간 기존 세제지원 받을 수 있는 점감구간 신설 검토	재경부
중기 지원체계의 성장촉진형 개편방안 마련	재경부·중기부